
제2차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 2010 ~ 2014

2009. 12.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지식경제부·보건복지가족부·환경부·
노동부·여성부·국토해양부

목 차

I. 삶의 질 향상대책 개요	1
1. 대책 추진 경과	1
2. 제1차 기본계획 평가	3
3. 여건전망과 정책 패러다임 변화	5
II 제2차 기본계획의 비전·목표 및 추진전략	7
III. 삶의 질 향상제도의 선진화 : 2대 기본제도 도입	8
1. 농어촌서비스기준 제정	8
2. 농어촌영향관리가이드라인 운용	9
IV. 7대 부문별 추진 과제	11
1. 보건·복지 증진	11
2.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	23
3.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	32
4. 농어촌의 경제활동 다각화	40
5. 문화·여가여건 향상	50
6. 농어촌 환경·경관 개선	57
7. 지역발전 역량강화	66
V. 계획의 실행 및 관리	72
1. 계획수립 및 평가체계	72
2. 삶의 질 향상 정책추진체계 강화 방안	74
VI. 투융자계획	75
<참고> 1. 농어촌서비스기준	77
2. 광특회계 개편 및 포괄보조금 현황	80
3. 영국·캐나다의 농촌영향관리제도	84
4. 기본계획 세부추진과제 현황	87

I. 삶의 질 향상 대책 개요

1 대책 추진 경과

□ DDA·FTA 등 개방 확대에 대응하고 낙후된 농어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특별법 제정('04.3월 공포)

- 매 5년마다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수립 및 삶의 질 향상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중심의 범정부적 추진체계 구축

< 기본계획의 목적·성격 >

- ◆ 농어촌 복지, 교육, 지역개발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법정·종합계획
- ◆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5년간의 중장기 비전과 추진 전략을 제시, 부처별 시행계획 및 지자체별 계획의 지침

- 농어촌특별세를 삶의 질 향상 분야에 집중 지원

□ 제1차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5개년 기본계획 수립('05.4)

- 농산어촌 복지실태조사('04.8~11) 및 지자체, 농민단체 등 의견 수렴을 거쳐 관계부처 공동으로 기본계획 마련('05.4.16)

* 기획재정·교육과학기술·행정안전·문화체육·농림수산식품·지식경제·보건복지가족·환경·노동·여성·국토해양부 등 11개 부처 참여

- '삶과 휴양, 산업이 조화된 복합 정주공간으로서의 농산어촌' 구현을 목표로 교육·복지·지역개발·산업 등 4대 분야 133개 과제 추진

* '05~'09간 22.3조원을 투융자, 당초계획(20.3조원)대비 109.9%달성 전망

- 기본계획에 따라 시·도, 시·군 5개년 계획 수립('05.10월)

<1차 계획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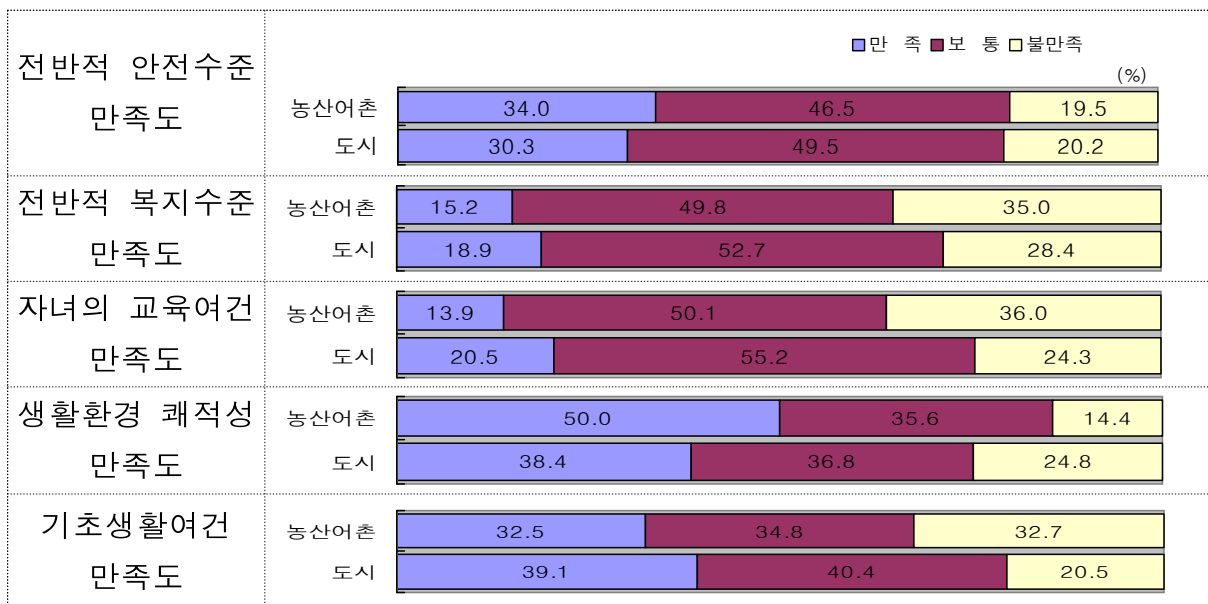
- ① 농어촌 복지기반 확충 : 농림어업인 사회안전망 강화, 농어촌 공공 의료서비스 제고, 여성·노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강화 등
- ②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 : 농어촌의 교육현실을 감안하여 교육단계별 공교육서비스 확충, 교육비 부담 경감, 우수교원 확충 등
- ③ 농어촌 지역개발 : 농어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 지역단위의 자율적인 개발역량 강화
- ④ 복합산업 활성화 : 향토산업 육성, 농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농어촌 어메니티의 소득자원화 등

□ 기본계획에 따라 관계부처에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추진(매년)

-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점검·평가단을 통해 추진실적 점검·평가

□ 체계적인 2차 기본계획수립을 위해 복지, 교육 및 기초생활여건 등에 대한 농림어업인 복지실태조사 실시(통계청, '08.12월)

- 전반적 안전수준, 생활환경 쾌적성에 대한 주민 만족도는 높은 반면, 복지, 교육 및 기초생활여건 만족도가 도시에 비해 낮게 조사



□ 농림어업인 복지실태조사결과, 1차 기본계획 평가결과 등을 토대로,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제2차 기본계획(안) 마련('09.12월)

2 제1차 기본 계획 평가

성 과

- (농어촌정책 비전제시) 농어촌 문제 대응을 위한 범정부 종합계획 수립·추진으로 농어촌의 새로운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는 계기
 -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이행실적을 연도별로 평가하는 체계 구축
- (복지·교육) 사회안전망 강화 및 우수 교육기회 확대
 - 연금·건강보험료 지원 확대, 농어촌 기숙형고교(150개)·우수고 육성, 농어촌 출신 고교생 대학특별전형 비율 확대(3% → 4%)
 - * 1인당 건강보험료 경감액(비율) : ('04)210천원(30%)/연 → ('06~'09)404천원(50%)
- (생활인프라) 상하수도, 주택, 도로 등 기초생활환경 개선
 - * 면단위 상수도 보급률 : ('04) 36.2% → ('08) 56.8
 - * 농어촌주택개량 융자금('05~'09) : 1조6백억원(29천호)
- (농어촌 산업) 농어촌 부존자원을 활용한 2·3차 산업화 사례 확산
 - 신활력사업, 농공단지 육성 등으로 농어촌 소득원이 다양화되고 체험·휴양마을 등 도농교류활동 확산으로 지역경제 활력화에 기여
 - * 농공단지 : ('08)생산 31조원, 수출 78억불, 고용 120천명 등 경제적 파급효과
 - * 체험마을 방문객수/매출액 : ('04) 928천명/74억원 → ('08) 2,359/309
- (지역 역량) 지역 주도의 개발도입 및 지역 주민의 발전 역량 배양
 - 상향식 지역개발 경험축적으로 리더 층이 육성되고 주민참여의식이 함양되어 마을의 활력제고 사례(이천 부래미, 화천 토고미 등) 출현
 - * 마을 사무장(마을종합개발, 체험마을) 현황 : ('04) 0명 → ('09) 465
 - 지역개발 컨설팅·평가 등을 수행하는 컨설팅산업 발전
 - * 컨설팅·교육훈련 제공 민간업체 : ('02) 30개소 → ('09) 124

보완 과제

- (복지·교육) S/W 제공, 접근성 개선 등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수요자 중심의 복지·교육 서비스 전달 미흡
 - 영세·고령농, 다문화가족 등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와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정부가 측면 지원하는 능동적 복지 기반 강화 필요
 - 농어촌 교육 현실(열악한 교육여건 ↔ 학생수 감소 ↔ 학교 통폐합, 재정투자 기피)을 반영한 학교 육성 필요
- (기초생활인프라) 정주계층별(마을-읍·면-중소도시) 특성을 반영한 개발 미흡
 - 마을단위·H/W 위주로 접근하였고, S/W와 마을간·사업간 연계 및 정주계층별 생활서비스의 유기적 연계 필요
- (농어촌 산업) 2·3차 복합산업화가 진전되고 있으나 다양한 산업 유치를 바탕으로 한 고부가가치 확보는 미흡
 - 농어촌 체험·휴양사업 등 도농교류활동은 양적 성장에 비해 서비스 품질 확보 필요
- (추진체계) 중앙정부·공급자 중심의 사안별 정책추진으로 삶의 질 향상을 통합적·체계적으로 접근하는 데 한계
 - 일부 사업의 유사·중복해소, 사업간 연계 강화 및 S/W 중심의 접근으로 투자효율성 극대화 및 주민의 정책효과 체감도 향상 필요
 - 지자체 삶의 질 계획을 지역특성 에 맞게 수립·추진하고 삶의 질 위원회의 기획·조정 기능을 강화

3 여건 전망과 정책 패러다임 변화

□ (인구규모·구조) 인구감소·고령화 진전, 마을단위 생산·복지가 결합된 공동체 기능 약화, 다문화가족 증가 등 인구·가구 구성 다양화

○ 인구감소 추세가 계속될 경우 농어촌 활력저하 및 지속가능성 우려

* 농어촌 인구비중 : ('90)25.6% → ('00)20.0 → ('05)18.5 → ('14P)15.9 ~ 18.2(KREI, '09)

○ 결혼이민자, 외국인 노동자 유입 등에 의한 다문화가족과 영세·고령농, 독거노인 등의 증가로 복지수요 확대

* 농어촌 65세 이상 인구비율 : ('05) 18.6% → ('14P) 22.9(KREI, '04)

* 농어촌 외국인 이주여성 : ('05까지) 45천명 → ('08추정) 70 → ('14P) 115

□ (복합공간) 산업·정주·휴양공간으로서의 농어촌 수요 증대

○ 농업생산의 비중이 줄어들고 타 산업의 비중이 증가

* 농촌인구 대비 농림업 취업자 비율 : ('95) 25.1% → ('08추정) 20.7 → ('14P) 17.5

○ 농어촌 관광수요 : ('07) 45.2백만명 → ('14P) 77.9 (KREI, '07)

○ 도시민 중 56.3%가 농어촌 이주(28.1%는 10년내 이주)의향 (KREI, '07)

□ (지방화) 지역발전정책 추진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증대

○ 시·군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수립 및 포괄보조금 지원 등 정책 추진방식이 지자체 주도로 전환

□ (농어촌 자원)농어촌 환경·경관관리, 농촌다움, 지역고유자원에 대한 관심 증대

○ 생태·환경 가치에 대한 관심 증가, 웰빙(wellbeing) 중시, 농어촌 자원 발굴·상품화 등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의식 향상

□ (삶의 질 관련 정책패러다임 전환) “국민과 함께, 자연과 함께”

- ◇ 정책고객을 지역주민, 도시민 등으로 확대하고 국민의 참여와 적극적 소통을 통한 정책 추진
 - 식량공급뿐 아니라 생명·문화·행복의 터전으로 자리매김
- ◇ ‘농촌다움’, ‘생태문화자원’, ‘지속가능성’을 새로운 경쟁력의 원천으로 활용
 - ‘도시따라잡기’형 정책을 지양하고, ‘농촌다움’의 보전, 자원발굴 및 가치창출에 역점

【패러다임 전환】

구 분	과 거	미 래
농어촌 기능 및 정책 목표	식량공급기지	생명·문화·행복 향유의 다원적 공간
	평준화(equalization), 농가소득 및 경쟁력 증대	농촌지역 경쟁력(competitiveness), 지역자원 가치실현(valORIZATION), 미개척 자원 발굴
정책 주체 및 대상	중앙정부	중앙·지방정부, 다양한 이해당사자
	농어업인	도시민을 포함한 전체 국민
	농업	다양한 부문(농촌관광, 제조, 정보통신 등), 삶의 질 향상, 경관, 전통문화, 도농교류 등
추진 전략	농어촌 쇠퇴 방지(방어적)	농어촌 기회 활용 극대화(공세적)
	보조 개념의 지원	투자 개념의 지원
	농업, 복지 등 분야별 접근	통합적·지역단위별 접근
발전 방식	환경부담·자원 소모형	흙·물·바다가 살아있는 지속가능형

Ⅱ. 제2차 기본계획의 비전·목표 및 추진전략

비 전

◇ 삶터, 일터, 쉼터가 조화된 행복한 농어촌 구현

- 기초생활인프라와 복지기반이 갖추어지고, 다양한 산업이 발전하며, 누구나 찾고 싶고 살고 싶은 농어촌

부 문 별 목 표

1. 보건·복지 증진

농어민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한다.

2. 교육여건 개선

농어촌의 특성을 살린 교육기반을 확충하여 교육력을 강화한다.

3.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

쾌적하고 편리한 농어촌 생활공간을 창조한다.

4. 경제활동 다각화

경쟁력 있는 농어촌산업을 육성하고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한다.

5. 문화여가 여건향상

문화와 여가를 즐기는 즐거운 농어촌을 만든다.

6. 환경·경관 개선

흙·물·생명이 살아있는 아름다운 환경과 녹색성장 기반을 조성한다.

7. 지역발전 역량강화

농어촌을 이끌어가는 인재를 육성하고 협력적 개발을 강화한다.

추 진 전 략

▶ 삶의 질 향상을 위한 2대 선진제도 도입

- 농어촌서비스기준, 농어촌영향관리 가이드라인

▶ 지역이 주도하는 지속가능 발전 체계 구축

- 지역의 자율과 창의, 민간 참여 확대

▶ 삶의 질 향상 정책 추진체계 정비

- 사무국 기능 강화 및 지방계획 내실화

Ⅲ. 삶의 질 향상 제도의 선진화 : 2대 기본제도 도입

1 농어촌서비스기준 제정

◇ 농어촌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요구되는 공공서비스 항목과 최소한의 목표수준을 설정·운영

가. 성격 및 주요 내용

- 국민이 국토 어디에 살든지 일정 수준의 공공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국가적으로 최소한의 정책 목표를 설정하여 관리
- 주거, 교통, 교육, 보건의료, 사회복지, 응급, 문화여가, 정보통신 8개 분야 31개 항목(세부내용 별첨)
 - 분야별로 ① 주민의 삶에 필수적이고, ② 측정 가능하며, ③ 정책 목적으로 적합한 항목 선정
 - 서비스 특성별로 보급률, 빈도, 접근성, 대응시간 등 기준 제시
- 서비스 분야별 정책목표이자 중앙정부 및 지자체가 농어촌 정책추진 시 따라야 할 가이드라인

* 선진국 사례 : 영국(농촌서비스기준), 독일(전 국토의 등가치적 생활여건 확립) 등

나. 운용방안

- 서비스기준 실효성 확보를 위한 부처간 협력 제도화
 - 「삶의질향상특별법」에 근거규정 마련(법개정안 국회 심의 중)
 - 농어촌 사회통계 기반을 확충하고, 서비스기준 이행실태를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위원회에 보고
 - 위원회 사무국에서 총괄·평가하고 필요시 권고 등 실시
- 농어촌 서비스기준 세부 운영방안 마련('10)
 - 서비스 실태조사방법, 추진체계, 통계DB구축, 평가방법 등

* 실태조사는 '11년부터 매년 실시하되 심층조사가 필요한 항목은 격년제로 실시

2 농어촌영향관리 가이드라인 운용

◇ 정부정책이 농어촌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사전 점검

가. 배경 및 주요내용

□ 인구의 분산거주, 불리한 접근성 등 농어촌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 추진 시, 농어촌에 불리한 차별적 영향 발생 가능성

* (예시) 공공서비스 시설 설치 시, 인구규모만 적용할 경우 농어촌은 서비스 이용 자체가 곤란한 경우 발생

□ 정책 입안단계부터 농어촌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불리한 차별적 영향 발생 시, 최소화하는 보완 조치 강구

○ 가이드라인, 체크리스트 등을 통해 각 부처가 자율 점검하되, 필요시 전문연구기관의 분석·권고

○ 정책 수립에 걸림돌이 아닌 지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설계

* 선진국의 예 : Rural Proofing(영국, 뉴질랜드), Rural Lens(캐나다) 등

< 핵심적으로 고려해야 할 농어촌 특성(영국 사례) >

- ▷ 인프라 : 서비스 접근성 불리, 높은 공급 비용, 정보제공 시설 부족 등
- ▷ 농어촌 경제 : 협소한 시장, 소규모 사업체, 농어업 기반 경제
- ▷ 농어촌 지역사회 : 산재된 사회적 약자, 지역 기관들의 낮은 역량
- ▷ 농어촌 자원 : 환경·전통문화 보전, 지역사회 유지, 녹지공간 제공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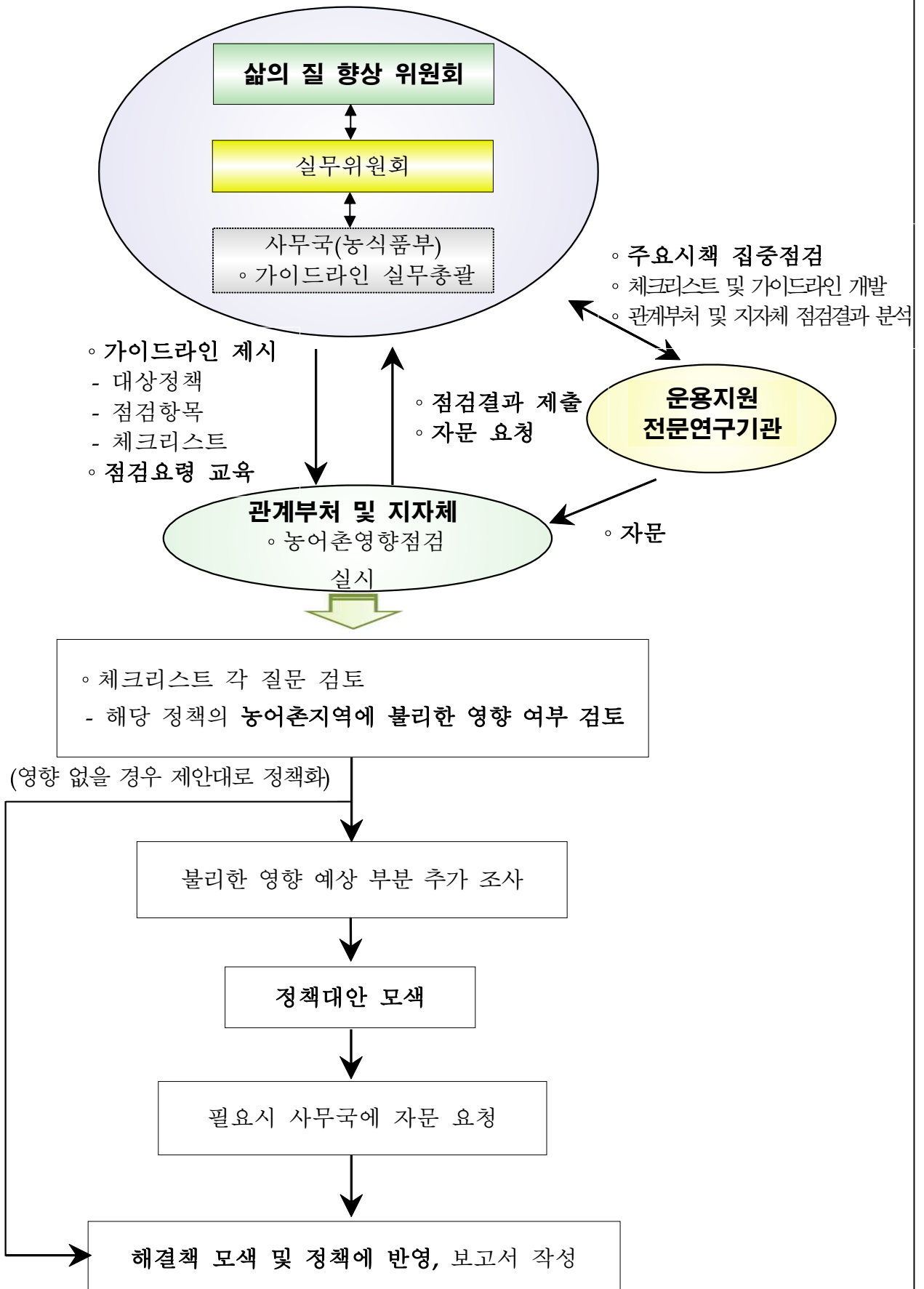
나. 도입 일정

□ 제도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10)

○ 대상정책, 점검항목, 체크리스트, 운용방안 등 마련

□ 주요사업에 대해 시범 적용('11~'12) 후 확대

〈 농어촌영향관리 가이드라인 흐름도 〉



IV. 7대 부문별 추진 과제

1 보건·복지 증진

목 표

농어촌 주민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보장

주
요
과
제

생활안정강화

- ▶ 연금·건강보험료 지원확대
- ▶ 농작업 재해 보장 강화

보건·의료확대

- ▶ 보건·의료기반 확충
- ▶ 응급의료서비스 확충

취약계층지원

- ▶ 영세고령농 복지지원 강화
- ▶ 다문화가족 지원강화

능동적 복지실현

- ▶ 농어촌공동체 회사 육성
- ▶ 민간기업·사회 단체 참여 유도

성
과
지
표

성 과 전 망	2009	2014
농어업인 재해보상 지원 강화		
○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률(%)/사망시 보상(백만원)	49/60	60/100
○ 수산인 안전공제 가입률(%)/사망시 보상(백만원)	20/45	50/80
응급의료기관 설치 확대(%)	73.6	100
119구급센터 설치 확대(개소)	0	175('12)
영유아 양육비 지원 확대 * 시설 이용 시 지원율(%)	70	90('12)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개소)	426	526
결혼이민자 영농정착 교육 확대(명)	1,200	5,000

가. 현황과 문제점

□ 농어업인 특례 등을 통해 사회안전망이 확충되고 있으나, 안정적인 생활유지에는 아직 미흡

○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등으로 농어업인의 사회보험료 부담이 경감되었으나, 연금 급여 수준 등이 아직 낮은 상태

* 국민연금 월 평균 수급액 : 일반(241,704원), 농어업인(169,095원)

* 신고소득이 낮아 향후 국민연금 급여액이 적고 여성 농업인의 가입율(16.5%, '09) 저조

○ 농어업인은 재해·안전사고에 대비 농작업 안전공제 등 별도의 공제제도를 이용하고 있으나 일반 산재 보상 수준에 크게 미흡

* 농업분야 재해율 : 1.4%, 산업 평균 재해율 : 0.71%('08)

□ 농어촌 보건·의료 인프라 개선을 위해 노력 중이나, 농어촌의 의료서비스 질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 의료인력 및 시설이 부족하고, 공중보건의에 대한 의존도가 높음

* 의료기관의 8.6%, 병상 수의 13%, 의사중 6.1%만 농어촌(군지역)에 소재('08.12), 보건(지)소 의사의 86%를 공중보건의가 담당('08.12)

○ 또한 응급의료기관이 부족하고, 응급환자 이송 체계가 취약

* 43개 군에 응급의료기관이 부재, 도서·산간 175개 읍면은 환자 이송에 30분 이상 소요

□ 농어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전반적으로 미흡

○ 은퇴 후 지원프로그램이 미흡하여 노인 다수가 생업에 종사

- 독거노인 등의 생활안정·의료보장 등을 위한 대책이 시급

* 노인의 생활비 마련방법 중 근로사업소득 비율 : 농촌 53.9%, 도시 33.4% ('07사회조사)

- 고령화 진전 등으로 농어업인의 의료비 부담이 가중

* 농어촌의 60세 이상 유병율이 높음(농촌: 45%, 도시: 41.6%, '08 사회조사)

○ 기초생활보장 농어가 특례에도 불구하고, 농지소유·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영세 농어가가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사례 발생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07, %) : 전국 평균 3.0, 도시 2.7, 농어촌 5.4

* 빈곤인구 대비 수급자 비율('07, %) 전국 평균 74.1, 대도시 93.5, 농어촌 48.6

○ 농어촌의 다문화가족이 증가하고 있으나 언어·문화차이로 인한 이혼율 증가, 자녀의 학교 부적응 등으로 정착에 어려움

* 농가 자녀 중 다문화 자녀(19세미만) 비중 전망 : ('05) 2.5% → ('20) 49

* 국제결혼(한국남자 + 외국여자) 이혼건수 : ('05) 2.4천명 → ('08) 8천명

○ 농어촌 여성의 사회·경제적 역할 증가에 따른 보육, 방과 후 돌봄 서비스 등을 위한 시설 및 프로그램 등이 부족

* 454개 읍·면은 보육시설, 879개 읍·면은 지역아동센터 부재('09), 전체 농어촌 초·중·고교(4,526개) 중 378개소(유치원 24개소 포함)에서만 돌봄학교 운영('09)

□ 교육, 돌봄, 일자리 창출, 공동체 활성화 등 지역 현안을 주민 스스로 해결하는 능동적 복지기반이 미흡

○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을 연계한 사회적 기업 육성이 미흡, 농어촌 현실과 산업특성을 반영한 모델 확산 필요

* 전체 사회적기업(266개) 중 22개만이 농어촌 소재 및 농어촌 대상으로 운영('09)

○ 다양한 복지서비스 전달 기능을 수행하는 민간 사회복지단체, 유관기관,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간 연계 부족

나. 주요 추진 과제

1-1. 농어업인 생활안정 강화

◇ 연금·건강보험료 지원을 내실화하고 농작업 재해·안전사고 재해보장 확대 등 사회안전망 지속 확충

(1) 건강보험료 지원제도 개선

□ 소득수준에 따른 건강보험료 차등 지원 및 내실화

- 고소득 농어업인은 현행보다 지원율을 인하하고, 저소득 고령 농어업인은 현행보다 지원을 내실화하여 형평성 제고
 - *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관련법 개정안 국회 제출('09.4)
 - * 현행 농업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 제도는 소득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건강보험료의 50%(농식품부 28% 지원, 복지부 22% 감면)를 경감·지원

(2) 연금보험료 지원 확대 및 가입 유도

□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수준을 연차적으로 상향조정

- *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기준소득금액 : ('08)67만원 → ('09)73만원 → ('10안)79만원

□ 지원방식을 농어가 단위에서 개인 단위로 지원하는 방안 검토

-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 농어업인이 희망할 경우 농어업의 기여도를 반영하여 연금보험 별도 가입 및 지원 추진

□ 미가입 농어업인의 국민연금 가입확대 유도를 위한 홍보 강화

- 연금 급여가 노후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실제소득 신고 유도

- * 국민연금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농가는 444천 세대이나, 국민연금 가입 및 보험료지원대상 농업인은 270천명(174천명 미가입)

(3) 농작업 재해 지원 강화

- 농어업 작업 중 발생하는 재해·안전사고 등에 대비한 농작업 안전공제 및 수산인 안전공제 보장수준 확대 및 가입률 제고
 - (농작업 안전공제) 사망시 보장수준을 현행 60백만원에서 '14년까지 100백만원 수준으로 확대
 - 공제 가입율을 현행 49%에서 '14년까지 60%수준으로 제고
 - * 농작업 안전공제 가입율 : ('04) 35% → ('09) 49.1 → ('14p) 60
 - (수산인 안전공제) 사망시 보장수준을 현행 45백만원에서 '14년까지 80백만원 수준으로 상향조정
 - 공제 가입율을 현행 20%에서 '14년까지 50% 수준으로 제고

(4) 농작업 재해예방 및 관리 시스템 구축

- 농작업 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 기반 조성
 - 전국 단위 표본 조사를 통해 농작업 재해 현황 통계 작성
 - * 국가통계 승인('09) 후 매 2년마다 통계조사 실시
 - 농작업 재해 원인구명 및 건강유해요인 노출 평가를 통해 농작업 안전관리 기준 마련
 - * ('09) 근골격계질환 평가→('10)농약중독→('11~)호흡기질환 등
 - 유비쿼터스기반 농작업 안전관리 지원시스템 구축(U-Safe Farm)
 - 생체정보측정 및 위치추적(RFID)기능이 탑재된 휴대형 단말기를 통해 농업인의 안전사고(낙상, 일사병, 농약중독 등) 예방

- 농작업장·시설 등에 대해 USN(Ubiquitous Sensor Network)을 활용한 유해인자 체크 및 경고시스템 구축
- 14개 마을 시범 적용후 '13년 이후 전국 확산(1시·군 당 1개소)

□ 농작업 재해예방을 위한 농작업 환경 개선사업 확대

- 농작업 안전모델 사업을 통해 마을 단위 농작업 환경 개선 추진
 - 농작업재해 모니터링 및 맞춤형 농작업 안전보건 서비스 지원
 - 대상 시범마을 : ('09)36개소 → ('14) 330
 - * 8개 의과대학 및 안전보건 전문가를 중심으로 분기별 재해 모니터링 실시
- 농작업 환경 개선 기술개발 및 현장보급 확대
 - 농작업 부담경감 기술 : ('09까지) 45종 → ('14까지) 80종
 - 편의장비 지원 : ('09까지) 147개소 → ('14까지) 2,000
- 농작업 안전 가상체험교육 등 재해예방·안전교육 강화
 - * 농촌진흥청 내 가상체험관 신설 및 가상체험 프로그램 개발('10)
- 농업안전보건정보 DB 구축 및 농가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09~'10)

(5) 농어업인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 농부증(農夫症) 예방 등 농어업인 건강증진을 위한 예방·검진 등 지원방안을 단계적으로 마련('10)
- 농업인질환센터 지정, 농업인 특수건강검진제도 도입 등 지원 방안 수립

1-2. 농어촌 보건·의료보장 확대

◇ 응급의료 인프라 등 공공 보건의료 시설을 확충하고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를 강화하여 농어촌 주민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

(1) 농어촌 보건·의료 기반 개선

□ 농어촌 응급의료 체계 개선

-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농어촌(43개 군)에 응급의료시설·장비 지원 및 응급의학과 공중보건의 우선 배치
 - 보건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13개 군), 병원급 의료기관(25개 군)이 있는 군은 시설지원 및 운영비 지원을 통해 응급의료기관으로 육성
 - 공공의료기관 및 병원급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은 군병원(2개 군) 또는 의원급 의료기관(3개 군)을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육성
- 취약지 응급진료권(6개 권역)의 지역응급의료센터 확충
 - '10년까지 3개소 확충 → '11년까지 6개소 모두 확충
- 농어촌 이송취약지역(이송시간 30분이상 소요)에 119 구급 지원 센터(구급대원 최소 2명 이상, 구급차 1대)를 단계적으로 설치
 - 구급지원센터 추가설치 계획(누계) : ('10) 50개 → ('11) 100 → ('12) 175
- 낙도·오지지역은 헬기·선박이용 응급환자이송체계 구축 지원
 - 첨단 IT기술을 활용한 u-Health 원격의료서비스 도입 병행
 - * 해경·산림청 헬기에 응급의료장비 설치(매년 8대) 및 오백지 헬기 착륙장 건립지원
 - * 해양경찰청 경비선에 응급의료장비 설치(누계) : ('10) 25척 → ('11) 51척 → ('12) 52척

□ 농어촌 보건의료 인력의 안정적 확보

- 의학전문대학원 졸업생 배출 이후 공중보건의 인력을 대체할 안정적인 의료인력 확보방안 마련('10)

* 의학전문대학원 전환비율: 54.4%, 치의학전문대학원 전환비율: 70.7%('09.7, 입학 정원기준)

□ 지역 공공의료체계 확립 및 시설·장비 현대화, 서비스 여건 개선

- 보건소, 보건지소 등을 예방적 종합보건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육성

* 만성질환(고혈압, 당뇨병)관리, 치매조기검진, 보충영양사업, 임산부·영유아 보충영양식품 제공 등

- 지방의료원(34개)을 공공의료서비스 중심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 육성

- 농어촌 의료취약지역에 병원급 의료기관 지원대책 마련

* 중소병원의 특성화(노인성질환, 재활 등)로 지역공공의료 체계와 유기적 관계 형성

(2)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및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강화

□ 보건(지)소의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강화

- 거동불편 노령자·장애인·임산부·영유아 등 취약계층부터 서비스를 강화하고 지역여건에 맞게 단계적으로 인력 확충 및 서비스 질 향상

* 맞춤형 방문관리서비스 인력 : ('08) 2천명 → ('10안) 2.7천명

□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 제공

- 의료시설 이용이 어려운 낙도지역에는 병원선을 이용한 이동진료 제공

* 경남, 전남, 인천, 충남 섬 지역 대상으로 지자체 자체적으로 병원선 운영 중

1-3. 농어촌 취약계층 복지 지원

◇ 영세·고령농, 다문화가족, 영·유아 등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 및 돌봄서비스의 양적·질적 확대 등을 통해 복지지원을 내실화

(1) 농어업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 빈곤 농어업인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대상자 선정기준 재정립

○ 소득평가액 산정시, 지출비용으로 인정하는 직불금의 범위 확대

* 현재 쌀소득 등 보전직불금 등은 지출비용에 포함되나 경영이양직불금 등은 미포함

○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시 공제되는 기초재산 공제액 특례 합리화

(2) 고령농업인 복지지원 강화

□ 농지 외 별도의 소득원이 없는 고령농을 위한 농지연금제 도입

○ 농지를 담보로 매달 생활비를 연금형태로 지원

- 지원대상 : 65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 경지면적 3ha 이하

* 농지연금을 받던 농업인이 사망하더라도, 배우자가 연금승계 가능

○ 연금운영 시스템개발, 상품설계 등 준비과정을 거쳐 '11년부터 시행

□ 은퇴하는 고령농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경영이양직불제를 내실있게 운영

○ 농지를 매도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75세까지 최장 10년에 걸쳐 월 250천원/ha 지급

* 경영이양직불제 참가 농가도 복지지원 등 농업인 관련 각종 특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0.3ha 이하의 농업경영은 허용

□ 영세·고령농어업인 주거복지 개선

- 영세고령농의 노후주택 개량 시 농어촌주택개량자금 우선 지원
- 고령농업인을 위한 집단거주 주택(공동체형 농어민홈) 조성 추진
 - '10년 도입방안 마련 및 '11년 시범사업 실시
- 대학생 자원봉사활동 등을 활용한 노후주택 고쳐주기 사업 활성화
 - * (재) 다솜동지복지재단, (사) 한국사랑의 집짓기 운동연합회(한국해비타트) 등 활용

(3) 영·유아 복지지원 확대 및 여성친화적 생활공간 조성

□ 영·유아 보육시설 시설 확충

- 농어촌지역에 국공립 보육시설을 매년 20개소씩 확충
 - * 전체 농어촌 보육시설('09) 6,504개소 중 국공립보육시설은 426개
- 아동수가 적지만 시설이 필요한 지역에 소규모 보육시설 설치
 - 마을회관, 유희공공시설, 보건지소 등 기존시설을 최대한 활용
 - * ('09) 10개소(시범사업) → ('11) 20 → ('14) 50
- 농어촌 보육시설에 영아(0~2세)반 설치를 위한 지원 확대

□ 영·유아 양육비 지원수준 상향 및 중·장기적 무상보육 추진

- 시설이용 지원 : ('09) 70% → (12P) 90% 수준
- 시설미이용 지원 : ('09) 35% → (12P) 60% 수준
 - * '09년 7월부터 하위 50%에 대하여 보육료 전액 지원(보건복지가족부)

□ 농어촌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확대 및 여성친화적 생활공간 조성

- 지역정책에 여성의 참여 제고 등 농어촌여성의 주류화 기반 마련
 - 공공시설 유모차대여 및 수유실 설치, 여성 불편신고센터 운영 등 농어촌 특성에 맞게 개발
 - 여성친화적 생활공간 창출을 위한 지역모델 개발 및 컨설팅 실시('11)

□ 여성농업인의 안정적 영농활동을 위한 복지서비스 확충 및
경제활동 역량제고 지원

- 시설이 열악한 여성농업인센터 개보수, 운영지원 등 기능제고
- 도시 기업인과의 교류·협력을 통한 경영마인드 제고
 - 창업여성농업인에 대한 경영기법 전수 및 기술적 컨설팅 제공

(4) 농어촌 다문화가족 복지 증진

□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기능 확대

- 지역 사회 결혼이민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통합서비스 제공
 - 한국어 교육, 다문화사회 이해교육, 가족교육, 상담, 자녀 언어 발달 지원, 취·창업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 센터 접근성이 낮은 다문화가족 대상, 찾아가는 방문교육서비스 (한국어 및 아동양육) 제공

□ 결혼이민자 영농정착 지원 강화

- 영농을 희망하는 경우, 전문여성농업인(후견인)을 연계한 1:1 맞춤형 영농교육 확대 및 기초농업기술 및 경영교육 추진
 - * 맞춤형 영농교육/ 기술 및 경영교육 : ('09) 700/500명 → ('14p) 2,500/2,500

(5) 고령·취약농,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등에 대한 복지지원 확대

□ 사고·질병 농가에 대한 영농도우미 확대 및 고령·취약 농가에
대한 가사 도우미 지원사업 다양화

- 영농도우미 상한연령 상향(70세 → 75세) 및 지원기간 확대(10일 → 15일) 추진 및 농어촌 경로당 지원 등 가사도우미 다양화

□ 취약·위גיע층 아동·청소년 대상 통합적 복지지원 확대

- 교육·복지 등 통합서비스 제공(농어촌형 드림스타트(0~12세)모델 제시)
- 위기 청소년 상담·보호·의료·자립 등을 위한 통합 지원체계(CYS-net) 구축 및 아동·청소년 발달지원서비스(방과 후 지원) 확대

1-4 농어촌의 능동적 복지기반 강화

◇ 농어촌공동체회사 육성 등을 통해 지역의 사회서비스 수요를 주민 스스로 해결하고 민간의 복지서비스 전달기능 활성화

□ 농어촌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교육·복지 등 사회서비스 수요를 커뮤니티 비즈니스 방식으로 해결하는 「농어촌공동체회사」 육성

○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로컬푸드 확산, 도농교류활성화, 사회복지 서비스공급, 지역교육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 접목

* 연구용역('09.12)을 토대로 농어촌 특성에 맞는 다양한 공동체회사 모델을 개발하는 등 중장기 육성방안 마련('10)

○ 농어촌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발굴·활성화

* 농어촌지역 사회적 기업 모델발굴 실태조사('09) 및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시범사업('10, 노동부)과 연계

□ 민간 기업 등의 농어촌 사회공헌 활동 활성화 유도

○ 민간기업의 사회적공헌 활동과 농어촌공동체회사 활동을 연계, 시너지 효과 도모

* 예) 교보생명의 교보다솜이 간병사업단, SK텔레콤의 행복도시락 등

○ 농어촌 사회공헌 활동 우수기업에 대한 인증 및 공공기관의 공사 발주 및 제품구매 시 우대 등으로 참여 유도

□ 민간 사회복지서비스 공급기반 확충 지원

○ 취약지역에 복지시설 우선 설치 또는 시설 다기능화 유도

○ 농·수협 등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참여를 통해 농어촌 지역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추진

* 농협은 2005년부터 지역문화복지센터 운영(현재 446개), 지역농협에서 건강 교실, 치매예방프로그램, 농촌사랑봉사단, 여성취미교실 등 진행

□ 새마을운동중앙회, 대한노인회 등 민간 사회단체의 자율적 복지프로그램 추진 활성화 유도

2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

목 표

농어촌 특성을 살린 교육기반· 교육력 강화



주
요
과
제

우수학교 육성

- ▶ 농어촌 전원학교
및 돌봄학교 육성
- ▶ 기숙형 학교 운영
내실화

교육프로그램 확충

- ▶ 원어민 영어수업
기회 확대
- ▶ 우수교원 확보를
위한 임용제도 도입

부담경감 및 기회확대

- ▶ 학자금 지원 확대
- ▶ 지역균형선발제
확대 유도

성
과
지
표

성 과 전 망	2009	2014
대학교(4년제) 진학률(%)	49.6('08)	60
농산어촌 전원학교 육성(개소)	-	110('11)
기숙형 고교 교육만족도(%)	-	70
원어민 영어수업 기회 확대(학교수)	2,655	4,000
학교·지역단위 교원 임용제도 도입	-	도입('11)

가. 현황 및 문제점

□ 농어촌 학생수 감소, 교육투자 감소 등에 따른 교육여건 악화로
학력수준이 전반적으로 저하

○ 학업 성취도 및 대학진학률 등의 도·농간 격차 확대

* 대학교(4년제) 진학률('08) : 농어촌 49.6, 도시 60.1

○ 대다수 교원들의 도시지역 근무선호와 교대 졸업생들의 농어촌
지역 임용시험 기피로 의욕 있는 농어촌 교원확보에 애로

* 도시지역 교원임용시험 경쟁률이 농어촌지역에 비해 2~3배 높은 수준

□ 농어촌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학교 육성 및 학습 프로그램 미흡

○ 교육문제와 지역의 공동체 활성화 및 사회·경제발전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는 통합적 접근이 부족

- 지역개발사업과 교육환경개선사업의 유기적인 연계가 미흡

○ 소규모학교 증가, 복식수업 등이 늘어나고 있으나 관련 교육교재,
프로그램 등 개발·보급 미흡

- 특히, 수요가 늘고 있는 영어, 특기적성 공교육 프로그램 부족

* 복식학급(초등학교) : 농어촌 745개(전체의 28.6%), 도시는 53개(1.7%)

□ 농어촌 현실에 맞는 평생학습 기반 및 프로그램 미흡

○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시설이 부족하고 자기계발 등
평생학습에 대한 주민 참여비율이 낮음

□ 대부분의 교육사업이 지방(교육청)으로 이양되어 중앙 단위에서의
사업계획·관리에 한계

○ 지방교육청·지자체의 교육분야 역량 확충 필요

나. 주요 추진 과제

2-1.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학교 육성

◇ 농산어촌 전원학교 및 돌봄학교 육성, 기숙형고교 운영 내실화 등을 통해 농어촌 현실에 맞는 교육·복지 학교모델 창출

(1) 학생이 돌아오는 학교조성을 위한 농산어촌 전원학교 육성

□ 자연친화적 환경과 첨단 e-러닝 시스템을 바탕으로 우수 공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자율학교로 육성

○ 자연체험 학습장, 생태연못, 산책로 등 자연친화적 시설과 전자 칠판, IPTV 등 e-러닝 교실 구축

○ 110개교(초77, 중33)를 선정, '09~'11년까지 총 1,393억원 지원

□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특색 있는 프로그램 운영

○ 지역사회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과 연계한 독서교육, 작가와의 만남, 에너지교육 및 텃밭가꾸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 자율 운영

○ 유치원생·저학년생의 원거리 통학문제를 해소하고, 보육과 교육을 동시에 제공하는 K-2학교를 전원학교 프로그램으로 통합·운영

(2) 교육·복지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연중 돌봄학교 육성

□ 농어촌 취약지역 학생의 학력신장과 기초안전망 제공을 위해 교육·복지 종합서비스 연중 지원

○ (학기 중) 학업성취도 향상 및 도농간 학력·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방과후에 다양한 교육·문화·복지프로그램 운영 지원

- (주말 및 방학) 자녀를 돌보기 어려운 가정을 대신하여 지역 사회와 연계하여 학습·문화·보건의료 등 지원

- 378개 유·초·중·고교(유 24, 초 222개 등)에 '09~'11년간 총 894억 지원

- 학교간 시설·프로그램 공동 활용 및 학교·지역간 인적·물적 자원 연계 추진

(3) 농어촌 적정규모 학교 육성

- 군 단위 농어촌 지역발전과 연계하여 적정규모 학교를 육성하고 시설 및 프로그램을 집중 지원하여 교육품질 제고

- 지역의 장기 발전계획과 연계하여 유·초·중·고등학교를 통합·재배치하여 학생의 학습권 보장 등 전반적 교육여건 개선
- 유·초·중등학교에 대해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등 지원으로 돌아오는 농산어촌 학교 육성

(4) 기숙형 학교 확대 및 운영 내실화

- 150개 기숙형 고교의 학력증진 및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지역 특성에 맞게 추진

-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의하여 프로그램 개발, 운영비 지원 등 지원
- 기숙사내 다양한 방과 후, 주말, 방학 중 프로그램 운영과 학생 맞춤형 교육으로 교육 만족도 제고

* 기숙형 고교현황(150개) : '08년 82개교(공립), '09년 68개교(공·사립)

* 지원금액 : ('08) 3,173억원, ('10) 2,720억원, ('11이후) 정책연구 후 사업 확대여부 검토

(5) 농어촌 평생교육기반 확충 및 평생교육 강화

□ 농어촌 지역 평생학습도시 지정 확대 및 운영내실화

- 농어촌 지역에 특화된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고, 농어촌 주민의 평생학습 이용 접근성 제고

* 평생학습도시 지정 76개 지자체 중 군지역은 13개

* 진안군은 「농촌 창업을 위한 평생학습 경제공동체 리더 양성」 프로그램 실시 중

□ 농어촌 지역 소외계층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으로 자립 능력 함양

- 평생교육에서 소외된 고령농어업인, 다문화 가정 등을 위한 맞춤형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만족도 제고

* 소외계층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 예산: 8.8억('09)

□ 농어촌 지역 학교의 도서관 등을 휴일·방과후에 지역주민에게 개방하여 사회교육의 장으로 활용

(6) 시·군 교육발전위원회 설치·활성화

□ 지역 교육현안에 대한 정례적인 협의를 위해 시·군 단위에 교육발전위원회 구성·운영

- 지자체, 교육청, 주민, 전문가 등 참여하는 협의회에서 지역개발 계획과 교육환경 개선과의 연계방안, 교육투자 활성화 방안 등 논의

2-2. 우수 공교육프로그램 확충 및 교원 확보

◇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확대 및 우수교원 확보 등으로 농어촌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학습능력 향상

(1) 우수 영어공교육 프로그램 제공으로 학생들의 영어능력 향상

□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확대 배치하여 영어교육 여건 개선

- 정부초청 해외 영어봉사 장학생을 선발하여 활용

* TaLK(Teaching and Learning in Korea)프로그램을 통해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 '08년 380명, '09년 543명 선발 배치

□ 원어민 원격 영어 화상강의 확대 및 국내 거주 원어민을 활용한 방학 중 무료 영어캠프 활성화

* '08년 56개교(2,882명 학생 수혜), '09년 531개교(33,855명) 참여

* 학생 117천명(비수도권 9만명) 및 3천명의 원어민 강사 참여, 학생 만족도가 최하 88%이상의 높은 만족도 실현('08)

(2) 다문화 가족 자녀 교육지원 강화

□ 농어촌 다문화 가족 학생의 한국어·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지원 강화

- 취학전 다문화가정 유아 등을 위한 수준별 발달지원 프로그램 개발·보급

- 한국어 등 기초학습능력이 부족한 학생을 대상으로 수준별 보충 프로그램 등 지원

- 기초학력 미달학생은 초·중등 예비교사 등을 활용하여 방과후 멘토링(교과지도·숙제지도) 지원

* 학생 중 읍·면지역 국제결혼 가정 자녀 : 8,180명(초 7,274, 중 718, 고 188)

(3) 농어촌 학교 우수교원 유치방안 강구

☐ 학교·지역단위 교원임용제도 도입('11년 시행)

- 기존 임용절차와 별도로 근무예정학교나 지역을 미리 공고하여 교원을 채용하고, 일정기간 전보를 제한하여 교원의 안정적 확보

☐ 농어촌 학교 교사 업무부담 경감

- 행정업무 처리 전담모형 개발 등을 통한 농어촌 학교 교사 업무 부담 경감방안 마련

☐ 교원연수원 등에 농어촌 연수프로그램 개설·운영

- 교사 연수 과정에 '농어촌 교육' 관련 강좌 등을 편성하여 농어촌에 대한 이해도 제고

(4) 사이버 가정학습 활성화

☐ 도·농간 협약을 통해 도시지역 인터넷 교육 콘텐츠 공동이용 활성화

- * 강남구와 가평군은 협약을 체결하여 강남구청은 수능강의 콘텐츠를 제공하고, 가평군은 학생들의 인터넷 수강비용을 지급

☐ 농어촌 지역 IPTV 공부방 추진

- 지역아동센터 등에 인터넷 방송 수신장비 및 디지털 TV설치 지원
- * 충청남도는 '09년도 지역아동센터 3곳에 IPTV 공부방을 설치, 향후 매년 50개씩 확대 추진

2-3. 교육비 부담 경감 및 균등 교육기회 제공

◇ 농어촌 지역 학생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대학입학 기회를 확대

(1) 농어업인 자녀 등 학자금 지원·용자 확대

□ 농어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

-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 손자녀 또는 동생이 있는 농업인에 대하여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을 지원

* 농어업인 고교생 학자금 지원현황('09) : 81,705명/801억원

□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지원 확대

- 농과계 대학생 등에 대한 학자금 보조(장학금 등) 지원 확대

* 농어업인 자녀 장학금 지급인원/지원금액 현황('09) : 농촌희망재단(2,300명/54억)
농협문화복지재단(1,205명/35억원)

- 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용자지원 지속 확대 및 상환부담 경감

- 졸업후 1년 유예 후 상환 → 상환 유예기간 연장 추진

* 학자금 무이자 용자 지원 현황('09) : 29천명/929억원

(2) 급식비 등 교육경비 지원 확대

□ 지자체 여건에 맞게 농어촌 초·중·고생 급식비 지속 지원

- 친환경농산물 등 우수농산물을 학교급식 재료로 활용 권장

* 전남은 친환경농산물을 학교급식 식재료로 활용('09 소요예산: 595억원)

○ 자영 농고·수산고 급식비 지원 단가를 연차적으로 인상

* '09년 지원인원 : 808천명, 지원 예상 : 992억원(분권교부세)

□ 농산어촌 지역 기숙형고교생 기숙사 이용 부담 경감 추진

○ 지자체와 지역교육청이 협의하여 저소득 농어업인 자녀의 기숙사 이용료(급식비, 프로그램이용료 등)를 지원하도록 권장

* 농촌지역 고교생 22만여명 중 3만 3천여명이 기숙사 이용

□ 원거리 통학이 용이하도록 무료 통학버스 지원 확대

○ 노후차량 교체 , 통학버스 안전도우미 수당 현실화 추진

(3) 지역균형 선발제 확대 유도

□ 농촌지역 학생들에게 균등한 대학진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균형 선발제 확대 추진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국립대학협의회 등을 통해 지역균형 선발제 확대 권장

* 선발인원: ('09) 4,964명→ ('10 예정) 6,248명

3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

목 표

쾌적하고 편리한 농어촌 생활공간 창조



주
요
과
제

지역주도 개발
정착·지원

- ▶ 지자체 포괄보조 예산제도 도입
- ▶ 지역개발 민간 참여 확대 유도

선도거점개발

- ▶ 정주계층별 맞춤형 정주공간 개발
- ▶ 거점별 기초생활 서비스 기능 향상

기초생활환경정비

- ▶ 주택개량 및 상수도 정비
- ▶ 교통·정보기반 확충

성
과
지
표

성 과 전 망	2009	2014
면단위 상수도 보급률(%)	45.2('07)	75.0
소생활권 종합정비 확대(권역)	221	700
농어촌 주택개량 융자금 지원 확대(천동)	7	10
정보화 교육 및 농어업 서비스 만족도(%)	80.0	85.0
광대역 통합망 구축률(%)	26.1	80.0

가. 현황과 문제점

□ 주택, 상·하수도, 도로 등 기초생활여건이 도시에 비해 취약

- 최저주거기준충족 주택비율('08) : (농어촌) 77.9%, (도시) 92.3
- 상수도 보급률('07) : (농어촌) 63.0%, (도시) 97.6
- 도로 포장률('07) : (농어촌) 73.5%, (도시) 98.2

□ 변화하는 인구구조 및 생활서비스 수요변화로 인해 달라지고 있는 마을-읍·면-중심도시의 역할을 감안한 체계적·계획적 개발 필요

- 마을-읍·면-중심도시를 잇는 서비스 공급체계의 종합정비 등

□ 지역개발 분야에서 지자체·지역사회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으나, 지방 주도의 개발을 뒷받침할 효과적 추진체계 미정립

- 포괄보조금제도 도입에 따라 지역발전을 주도할 지자체 역량을 강화하고, 중앙정부는 효과적으로 유도·지원하는 시스템 필요
- 공공부문 외에 민간부문의 자본·역량을 활용하여 지역개발 활성화 도모 필요

□ 기존 주민뿐만 아니라 농촌 이주 희망 도시민에게도 매력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개발모델 제시 필요

- 농어촌에 적정 수준의 인구가 유지될 수 있는 기반 구축

나. 주요 추진 과제

3-1. 지역 주도의 개발체계 정착 지원

◇ 지자체에 예산과 권한을 부여하고, 중앙정부는 간접 지원하는
상향식 개발체계 정착

(1) 지역사회 주도 개발을 뒷받침하는 포괄보조제도 도입

- 중앙정부의 기본적인 정책방향 하에 지자체가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스스로 계획을 수립하고 책임 있게 집행
 - 중앙정부는 가이드라인 제시, 모니터링, 컨설팅 지원을 하고 사업 결과를 평가하여 인센티브 부여
 - * 일반농산어촌개발(포괄보조사업, 지방비포함) : ('09) 12,900억원 → ('10) 13,910
 - 지자체는 사업계획 수립·시행 시 주거, 교통, 정보통신 등 분야별 농어촌 서비스기준이 달성되도록 최대한 노력

(2) 민간참여 확대와 파트너십에 의한 지역개발 추진

- 농어촌 마을건설·재개발사업 시행자를 민간까지 확대
 - (기존) 시·군, 한국농어촌공사 → (개선) 마을정비조합
 - 마을정비조합이 주택건설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가능
- 생활편의시설, 마을조성 등 다양한 지역개발관련 사업에 BTL(임차방식) 확대 등을 통해 민간 투자활성화 유도
 - 세부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방안은 지자체별 여건에 맞게 수립
 - 민자유치를 포함하는 사업계획에 대한 지원 우대
 - 성과 평가 시, 민간 주체·자본의 참여수준을 주요사항으로 고려

3-2. 정주계층별 선도거점 개발

◇ 「마을-소생활권-거점읍·면-중소도시」로 이어지는 지역개발의 기본 패턴을 정립

* 마을(기초생활 인프라 확충), 소생활권(소득기반확충, 분산마을정비), 읍·면(생활서비스, 기초서비스 거점), 중소도시(고차·광역서비스 거점)

(1) 신규마을 조성 및 기존마을 재개발로 인구유입 유도

□ 해당 지역의 발전모델을 제시하는 신규마을 조성

- 은퇴자·슬로우푸드(slow food)·예술인마을 등 특색 있는 모델 제시
* 전원마을 조성사업 등 : ('09) 108개소 → ('14P) 200
- 상하수도, 마을진입로·안길, 마을공동시설 확충 및 리모델링, 노후 주택개량 등 기본생활시설 및 주거환경개선
- 경관개선활동, 도시학생 농어촌유학 프로그램, 체험휴양사업 등 마을 공동사업 추진으로 공동체 활성화

□ 기존마을 주민과 이주 희망 도시민이 공동으로 마을 재개발 추진

- 귀농·귀촌 희망자에게 정보제공, 교육 및 자금지원을 연계하여 지자체별 귀농·귀촌사업 활성화 유도
- 마을기반 정비, 지역 특성에 맞는 농업·농외소득 창출방안, 마을 공동체 강화, 교육·복지·문화·친교프로그램 등을 결합하여 추진

(2) 소생활권 종합 정비

- 영농·생활권 단위로 권역화(3~5개마을) 하여 소득기반확충, 생활환경정비, 경관정비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
- 주민참여와 파트너십(주민-기업-공공), 지역역량 향상 등을 기반으로 하는 상향식 농촌지역개발의 대표 모델로 정착

* ('09) 총 221개 권역 추진 중 → ('14P) 700개 권역 추진

* 마을종합개발 : 지역주민 22만여명, 컨설팅업체 55개, 전문가 130여명 등 참여

(3) 거점읍·면의 기초생활서비스·농어촌 경제 거점 기능 향상

□ 거점읍·면 소재지를 기초서비스의 중심지 및 경제활동 다각화 선도거점으로 활성화

- 보육·운동·휴식·생활편의 시설을 갖춘 복합커뮤니티 센터 및 재래시장 활성화 등 생활편의 기초서비스 거점지역으로 종합개발

□ 농어촌지역과 인근 중소도시의 동반 발전을 추구하는 도·농 통합적 접근을 통해 서비스 전달체계를 재정비

- 거점지역과 배후마을 및 인근 중소도시 간 서비스 접근성 개선 및 제공방식 다양화

(4) 혁신적 농어촌 개발 모델의 도입·적용 추진

□ 젊은 층 유입을 위해 쾌적한 주거환경 및 생활편의 시설을 갖춘 농어촌형 뉴타운 조성

- 지역특성에 맞는 소득 창출방안, 교육·복지·문화·친교 프로그램 및 기존 사업과의 연계 추진계획 등 반영

* ('10년) 203억원, 시범사업 5개소 추진 후 농어촌개발 모델로 확립

□ 지역테마 중심으로 브랜드·명소를 창출하는 금수강촌 만들기 추진

- 특산물, 역사·문화, 자연 등 지역의 유·무형 자원을 토대로 테마와 이야기(Story-Telling)가 있는 명소를 조성

- 다양한 지역개발 사업들이 종합배치되도록 통합설계(Grand Design)하고 이들 전체를 네트워크화

- 테마중심으로 농산물 생산·가공·체험·휴양 등 서비스 연계

* 금수강촌 모델정립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10)

3-3. 농어촌 기초생활여건 개선

◇ 농어촌 어디에 거주하든지 기본적인 기초생활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도록 생활환경을 종합 정비

(1) 주택개량 및 상수도 정비

□ 농어촌 주택개량 확대

- 농어촌주택을 보다 쉽게 신·개축할 수 있도록 주택개량을 위한 융자금 지원한도 상향 및 지원물량 확대
 - 지원물량(동) : ('09) 7천동 → ('14P) 10천동
 - 농어촌 특성과 전통을 살린 다양한 주거모델(환경친화형, 고풍자편의형, 에너지절약형 등) 개발·보급
- 노후주택 고쳐주기 캠페인 등을 통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으로 주택개량 등 생활여건 개선에 지자체·민간 참여 확대
 - * (재) 다솜복지재단, 새마을운동중앙회 등 사회복지단체를 중심으로 매년 4천여 가구 개량 지원중
- 마을경관개선 등을 위해 농어촌 빈집 정비 추진
 - 일반농산어촌개발 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개정
 - * 지자체 농어촌 빈집정비 현황('97~'09) : 91천동/452억원

□ 농어촌주택 슬레이트 철거 처리 지원('10~)

- 농어촌 슬레이트주택 개량 시,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우선지원
 - * 표본조사 결과, 농가 건물의 약 38%가 슬레이트 지붕재 사용
- 농어촌 슬레이트 처리 지원방안 검토('10)

- 농어촌 노후 슬레이트 처리비용(제거, 수립·운반, 매립)을 지원 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

* 농어촌 슬레이트 현황 조사('09~'10) 및 '슬레이트 관리 및 처리 매뉴얼' 개발·보급('10)

□ 상수도 보급률 증대 및 수질관리 강화

- 면단위 상수도 보급률을 '14년까지 75%로 제고('10~'14간 11,361억원 투자)
 - 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자연마을 중 30호 이상 마을은 간이(마을) 상수도를 설치하되, 지자체에서 관련 기준에 따라 수질 관리
 - 면단위 지역 생활용수의 안정 공급을 위해 지방상수도시설 확충
- 농업·생활용수가 부족한 지역은 암반관정 개발 및 이용시설 (정수시설, 송·배수관, 물탱크 등) 설치 지원
 - '09~'12년 간 1,218개소 개발('94~'08년까지 5,842개소 개발)

(2) 농어촌 도로·교통망 정비 등 교통서비스 개선

□ 농어촌 주민 교통편의 및 서비스 접근성 개선을 위해 도로정비 지속 추진 및 교통시스템 개선

- 지자체의 벽지노선 운행버스 손실비용 지원, 순환버스 운행 지원 또는 수요 대응형 교통수단 제공 등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수단 강구
 - * 사례) 전남 신안군은 13개 버스노선 공영버스화로 주민만족도 제고
- 도보왕래가 많은 농어촌 도로 및 지방도 등을 정비시, 차도와 구분된 인도를 확보하도록 유도

□ 낙도 도서주민에 안정적인 해상교통수단 제공 및 교통비 부담 완화

- 전국의 26개 보조항로*에 운항하는 국고여객선 26척에 대해 노후선 대체건조 또는 차도선으로 개조 지원

* 보조항로 : 국가가 도서주민의 해상교통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운항에 따른 결손금액을 보조하는 항로(해운법 15조)

- 도서지역 주민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여객선 운임 지원
 - 도서민에 한해 여객선 운임의 20%를 지원하되, 본인부담액이 5천원 이하가 되도록 지원

(3) 농어촌 특성에 맞는 정보화기반 구축 및 교육 추진

□ 농어업 현장에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개발

- u-IT 기술 등을 활용한 생산·유통·경영정보시스템 개발·보급
 - u-IT 기술 활용 농업생산기반 지능화 투자('10안) : 35억원
 - * (전남 신안군) RFID(전자태그) 기술을 활용한 천일염 이력관리시스템 구축

□ 농어촌 정보화교육 등을 통한 도·농간 정보격차 해소

- '14년까지 농어업인 20만명을 대상으로 실생활 및 영농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정보화교육 실시
 - 인터넷뱅킹, 전자상거래, 전자정부 이용 등 생활체감형 교육 강화
 - 컴퓨터 활용능력이 일정 수준에 도달한 농어업인에게는 소득 창출로 연결가능한 프로그램 제공
 - 농어업정보서비스 및 농어업인정보화교육 투자('10안) : 72억원

□ 농어촌 어디에서나 IPTV 시청이 가능하도록 광대역통합망 구축

- '10년 실태조사를 거쳐 '14년까지 80% 구축('15년까지 구축 완료)

4 농어촌의 경제활동 다각화

목 표

경쟁력 있는 농어촌산업 육성 및 다양한 일자리 창출

주요 과제

농어촌산업 고도화· 고부가가치화

- ▶ 향토자원 활용 1·2·3차 산업 융복합화 추진
- ▶ 창업 활성화 및 기업성장 지원체계 구축
- ▶ 연계협력 강화 및 체계적 투자

도농교류 활성화

- ▶ 특성화된 체험·휴양기반 확충
- ▶ 다양한 형태의 도농교류 활동 활성화

성 과 지 표

성 과 전 망	2009	2014
농외소득 비중 확대 (%)	68.4('08)	75
농공단지 조성 확대(개소)	330('08)	400
국내관광중 농촌관광 비중(%)	16.8('07)	28.0
농어촌 체험마을 확충(개소)	544	817
1사1촌 자매결연 건수 (건/매년)	7,483	7,500

가. 현황과 문제점

- 향토자원을 발굴·산업화하는 지역의 노력으로 일정 수준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본격적인 고부가가치 확보단계 진입에 애로
 - 산업화 가능성이 있는 향토자원을 고부가가치 상품화할 수 있는 체계적 지원시스템*이 미흡
 - * 제품 및 공정개발을 위한 R&D 활동, 홍보·마케팅, 자금조달, 컨설팅 등 사업지원서비스, 지적 재산권 확보 등
 - 특히, 창업 및 전문경영체로의 성장에 필요한 요소(창업보육, 우수인력, 경영·회계·법무지원 등)에 대한 접근성 및 지원체계 취약
- 향토산업 진흥을 위한 지역단위의 전략적·체계적 접근이 미흡하고, 지역간 연계·협력을 통한 산업화 성과의 광역화·규모화 노력 부족
- 정부 지원시책이 공급·생산 측면에 편중되어 수요·소비에 대한 고려가 부족
 - 자원 발굴 및 생산·가공·유통 등 공급기반에 중점 지원하고, 시장성 분석 등 수요 측면 정책 추진 미흡
- 국민의 생활패턴 변화로 농어촌 체험·휴양 수요가 증대되고 있으나, 이를 소득·사업기회로 활용하는 체계가 미흡
 - 농가·마을·거점형 등 기본적인 체험·휴양기반은 확충되고 있으나, 늘어나는 수요에 비해 상품·서비스의 다양성·품질이 미흡
 - 도농교류촉진법 제정, 1사1촌운동 전개 등으로 도농교류가 양적으로 크게 늘었으나, 이를 직거래 등 지속적 교류차원으로 심화 필요

나. 주요 추진과제

4-1. 지역산업 융·복합화를 통한 농어촌산업 고도화

◇ 향토자원을 활용한 1차-2차-3차 산업의 융복합화를 통해 농어촌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고용과 소득의 안정적 성장 토대를 구축

* 2차 계획기간('10~'14) 중 농어촌 기업 매출액 27조원, 일자리 5만6천개 창출

(1) 지역 주도의 농어촌산업 활성화 기반 강화

□ 향토자원 산업화를 위한 지자체의 전략적·체계적 투자 촉진

- 농어촌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통합(13 → 1개 포괄보조금)하고, 지자체가 계획수립·시행토록 자율성 확대
 - 지역 산업화 역량강화, 상품 생산·유통기반 구축, 홍보·마케팅 전략 수립, 가공 등 공동이용시설 설치·관리 등 추진
 - *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포괄보조, 지방비포함) : ('09) 3,916억원 → ('10) 4,738
 - * (사례) 전북 부안 : 뽕·오디의 산업화를 통해 뽕재배 농가 확대('05년 45농가 → '08년 697농가) 및 농가소득 증대로 지역 농업 발전에 기여
- 지역별 핵심자원에 대한 선택과 집중투자로 차별화된 경쟁력 확보

□ 산업화 촉진을 위한 지역단위 R&D 투자 확대 및 지원체계 구축

- 새로운 제품 발굴·자원화, 제품·공정 개발, 지적재산권 확보 등 지역 단위 R&D 투자 확대 유도
 - * 향토산업육성지원 등 지역 R&D 분야 지원('10안) : 313억원
- 농어촌산업에 대한 종합적·다층적인 지역 R&D 지원체계 구축
 - 중앙(농식품부, 농촌진흥청) - 도(농업기술원, 지역협력단) - 시·군(지역협력단,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단계로 기능분담 체계 정비
 - 지역 특성화 연구과제를 신설하고 지역개발 사업과 연구사업간 연계를 강화(특성화 연구기관의 참여 권장)

(2) 농어촌 지역 생산품에 대한 수요 확대 지원

□ 국내외 시장 개척활동 및 전략적 수요처 발굴 지원

- 박람회 개최, 마케팅 전략 컨설팅 등을 통해 시장 접근기회 다양화
 - 농어촌산업박람회를 대표적인 지역생산품의 판촉·상담 장으로 육성
 - 대형 마트, 농수협 매장 등 주요 판매처와 지자체를 연결하고, 지역 생산품 전문코너 개설 유도 등 마케팅전략 컨설팅 지원
- 해외 박람회, 국외바이어 초청 품평회 등 수출시장 개척활동 지원

□ 농어촌 체험관광 확대, 도농교류·지역축제, 한식세계화 등과 연계한 장소마케팅(Place marketing) 강화

- 지역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지역 전통시장·5일장 활성화 및 파머스마켓, 직거래장터, 소비자단체, 택배를 활용한 직거래 활동 등 촉진
- 『한식문화체험관』을 통해 한식 관련 전시, 체험상품 개발·제공('11)

□ 전자상거래 활성화로 지역생산품에 대한 수요확대 지원

- 농어촌 정보화마을('08까지 358개소)등의 상품 품질관리, 지도자 및 운영자 역량강화, 새로운 수익모델 개발
- * 정보화마을 운영비 지원('10안) : 110억원

□ 로컬푸드 운동 등 지역유통 활성화, 지역내 農商工 제휴를 촉진

- * [사례1] 여주군 농민영농조합법인은 지자체와 협력하여 친환경급식센터를 만들어 관내 초등학교에 식재료 공급
- * [사례2] 무안 황토랑공사는 지자체·협동조합·기업이 백련과 양파관련 상품의 지역 브랜드를 공동 개발하여 활용

□ 지역 생산품 시장규모, 경쟁·유사제품과 소비자 반응 등 시장성을 분석, 지자체·민간에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체계 구축

- 시장성을 감안한 최적의 R&D, 마케팅 전략, 자금조달방식 선택을 돕고, 민간펀드 등 투자 유도

(3) 농어촌 지역 창업 및 기업성장 지원체계 정비

□ 소규모 창업 및 소득증대 활동 지원을 통한 농어촌형 微小기업 (micro-business) 창업 활성화 및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 고양

- 농외소득법 제정·시행을 계기로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를 설치하고 농어촌형 미소기업의 창업보육 종합 지원센터로 정립

* ('10년)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설치 기술지원 10억원(4개소)

- 마을단위, 가족단위, 여성·노인층 등 고용취약계층의 단체 창업 등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체계 마련

□ 소규모 사업체 및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 농어촌형 기업 육성 지원 프로그램 도입·운영('11)

- 공동 가공시설 설치·이용, 가공·마케팅 지원, 자금조달 개선, 기술개발 지원, 규제완화 등 종합 지원

* '09년 농어촌기업 실태조사 등을 토대로 '10년중 과제 확정

- 농업기술센터, 소상공인지원센터,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협력단 등의 기능을 연계하여 지역 단위 농상공 상생협력기구 설치 유도

□ 농촌 입지 제조업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인프라 내실화 추진

- 농공단지는 2차 계획기간까지 약 400개소('08년까지 330개소) 조성을 완료하고, 노후단지 리모델링 등 인프라 보강 및 소프트웨어 지원에 역점

* 지역 식품산업, 향토자원 활용형 기업을 위한 특화산업단지 활성화 유도

(4) 지역간 농어촌산업 활성화 연계·협력 프로그램 지원

□ 농어촌산업의 규모화·광역화와 시장접근성 제고를 위한 지역간 (시·군간) 연계·협력 촉진

○ 동일 테마(품목)를 공동마케팅 하는 등 시·군간 자발적 협력을 바탕으로 공동사업 전개 촉진

- 시·군간 테마별 연계 마케팅전략, 공동판매장, 안테나숍 등

* (사례) 한방생약초산업 : 제천·산청·진안·대구 동구 등 12개 지자체간에 한방 약초산업 진흥 협의체 구성(지역별 약초품목 특화, 한방 전문인력 양성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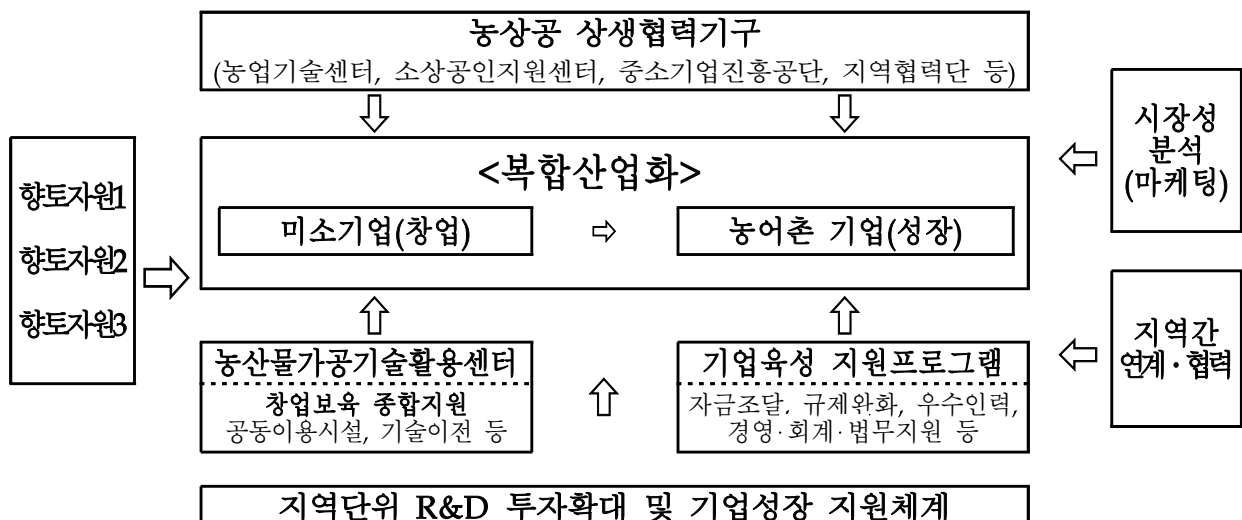
* (예시) 대도시에 지자체 연합출자로 와인판매장을 형성, 국내산 와인(영동, 영천, 부안, 청도 등)과 국내산 안주(임실 치즈, 서천 김, 상주 꽃감 등)로 시너지 창출

○ 시·군간 연계·협력사업 추진시 평가 등을 통해 인센티브 지원

□ 소비지 지자체와 농어촌지역 생산지 지자체간 연계·협력을 유도하여 전략적 판매처 확대 및 소비자의 만족도 제고

* (사례) 전남 신안군과 서울 마포구간 MOU 체결을 통해 천일염 마케팅 강화 : 소비자가 원하는 특성화된 시장개설도 구상중

창업에서 R&D, 제도 지원에 이르는 농어촌산업 관련 비즈니스 생태계(business eco-system)를 종합 정비



4.2 체험·휴양 기반 구축 및 도농교류 활성화

◇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체험·휴양서비스 인프라 확충 및 도농교류 생활화를 통해 농어촌지역 사회·경제 활성화 유도

(1) 농가-마을-거점별로 특성화된 농어촌 체험·휴양 기반 확충

□ (거점) 농어촌 테마공원, 어촌관광단지, 산림휴양시설 등 다양한 농어촌 체험·휴양 거점 지속 확충 및 연계 운영

* 농어촌테마공원: ('09까지) 22개소 → ('14p) 82

* 산림휴양시설: ('09까지) 281개소 → ('14p) 363

○ 문화교류를 위한 지역밀착형 신문화 공간, 생태·문화·역사자원 등과 연계한 산림문화체험숲길 등을 확대 조성하고 상호 연계

* 신문화공간조성사업 '09~'11년 6개 시범 추진, 산림문화체험숲길 1,000km

□ (마을) 농어촌의 경관과 문화·역사, 생태자원, 농어업 자원·활동 등을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조성

○ 체험기반 조성,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지원을 통해 운영 내실화

* 농어촌체험마을 : ('09까지) 544개소 → ('14까지) 817

□ (농가) 체험과 산업, 교육 등을 연계한 다양한 농가형 체험관광 조성

* 낙농체험관광사업 : ('09까지) 18개소 → ('14까지) 38

* 교육농장 : ('09까지) 176개소 → ('14까지) 680

(2) 도시형 도농교류 인프라 구축

□ 대도시 입지 도농교류 거점으로 '도농교류 안테나 숲' 네트워크 구축

○ 농어촌체험·휴양정보, 농어촌유학, 전원생활 정보·상담, 문화교류 정보, 도농교류 기업의 제품 전시·판매 등 서비스 제공

□ 녹색성장의 실천을 생활화하기 위한 도시농업모델 발굴·확산

- 도시농업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모델개발 및 교육, 기술지도, 제도적 지원 방안 마련('10)을 거쳐 도시농업 정착 유도

* 도시근교 체재형 주말농장, 시민(또는 상자)텃밭, 옥상정원 등

(3) 농어촌 체험·휴양 서비스업 고도화 및 다각화

□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사업자 육성 및 브랜드화('10~)

- 지역 특성에 맞는 컨설팅, 경영지원 등으로 사업자를 육성하고 사업자(마을)간 네트워크 기반을 구축하여 상호 정보교환 등 유도

- 농어촌체험·휴양마을 평가시스템을 도입하여 품질향상 유도

* 프랑스(지트), 영국(팜스테이) 등 해외사례를 참조, 서비스 수준 등 평가

- 한식 세계화와 연계, 외국인이 농어촌에서 다양한 한식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정보 제공 및 홍보 강화

- 특색 있는 음식과 문화·역사 등을 외국어로 소개

□ 체험·휴양사업자가 다양한 경제활동을 복합적으로 수행하는 도농교류형 '농어촌 공동체 회사'로 발전토록 유도

- 농가 레스토랑, 체험학교, 마을문화공방 등 소규모 경영모델 발굴·육성

* 농업을 근간으로 한 다양한 도농교류형 농어촌 공동체회사 100개소 발굴

□ 슬로시티를 국제적인 농어촌 관광상품으로 발전 유도

- 아시아 최초로 인증된 슬로시티(담양, 장흥, 신안, 완도, 하동, 예산)를 국제적인 관광 상품으로 개발하여 한국 고유문화를 전파

- 방문자센터, 체험장 등 기초인프라 구축과 통합 홍보·마케팅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지역별 휴양·체험프로그램과 연계

(4) 도농교류·1사1촌운동 심화를 위한 도농교류 문화운동 저변확대

□ 도시민, 지역주민 및 사회단체 등과 연계한 농어촌 환경·문화·경관 보전활동 추진

- 양수장, 정미소, 가공공장 등 근대의 농어업·농어촌 역사가 담긴 자원을 발굴하여 보전 및 활용

* (유사 사례) 일본 시라가와촌·일본환경교육포럼·도요타 자동차(주)가 ‘도요타 시라가와 자연학교’를 설립하여 환경교육, 자연보전활동 추진

- 중앙정부·지자체는 알선·상담, 정보제공, 재정지원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촉진하는 지원시스템 마련('10)

□ 1사1촌 운동을 1사다촌, 다사1촌으로 다양화하고 농산물 소비, 자원보전활동과 연계 발전

-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하는 농산물 소비운동 전국 확산

* (유사사례) 미국 CSA(Community Supported Agriculture), 프랑스 아마프(AMAP)협회 활동

- NGO 협력활동 확대 및 500여개 우수 활동 모델 발굴·확산('14년)

* (예) 오창농협과 SK그룹과의 결연(1촌다사), 1사1군, 도농 창업, 1가족1농가 등

□ 초·중등학생의 농어촌 체험·교류 사업 확대

- 도시학생이 한 학기 이상 농어촌에서 교육을 받도록 하는 농어촌 유학제도 활성화

- 유학프로그램·매뉴얼개발과 시범사업 실시('10) 후 단계적으로 확대

* 유학센터 대표·지자체·교육청·학교 등이 참여하는 ‘(가칭)농어촌 유학 추진단’ 구성

- 농어촌체험 시범학교 ‘팜 스쿨(Farm-School)’ 운영(‘10년)
 - 도시학교와 농어촌체험마을 간의 1교1촌 결연을 맺어, 초등교과 과정과 연계된 농어촌체험학습 운영
 - * (사례) 서울 당현초등학교와 화천군 토고미 마을
- 시·도 교육청과 지자체간 농어촌 현장체험교육 공동협력추진 확대
 - * ‘충남교육청-서천군’은 농어촌현장체험교육을 위한 협약을 체결(‘09.7)
- 초등학교 기간 중 최소 1회, 3~5일간 농어촌 장기 체류형 체험 교육을 유도하는 장기간 교류사업 추진

□ 도농교류 수요 창출을 위한 대국민 홍보 강화

- 도농교류 활동 촉진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농어촌 주민과 도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시행
 - * 여름휴가 페스티벌 개최(‘05~), 도농교류 정부포상(‘04~), 농어촌 축제(‘08~), 도농교류 협력사업(‘99~) 등
 - * 도시민 유치 지원사업 : (‘09) 10개 시·군 → (‘13이후) 30개

□ 農商간 자율적 신뢰협력 사업을 통한 새로운 시장문화 형성유도

- 전통시장 상인, 농어민간 현장 교차방문 및 체험을 통한 상호 이해 증진(전국상인연합회와 농협 공동 추진)
- 전통시장 내 빈점포 등을 농상간 정보교류, 도시민에 대한 정보 제공, 만남의 장 등으로 활용
- 우수 도농교류 중소기업에 ‘1사 1촌 사회공헌 인증’을 수여하고 기업 홍보 (농촌사랑운동범국민본부, 농식품부 지원)

5 문화·여가여건 향상

목 표

문화와 여가를 즐기는 즐거운 농어촌 만들기



주요 과제

문화·여가 인프라 구축

- ▶ 문화공간·생활체육 인프라 구축 지원
- ▶ 지역 맞춤형 문화 컨설팅 기반 구축

문화향유기회 확대

- ▶ 찾아가는 문화 서비스 확대 지원
- ▶ 생활문화·예술 활성화

전문인력 파견·교육확대

- ▶ 문화예술전문인력 파견(순회) 확대
- ▶ 학생 문화예술 교육기회 확대

성과 지표

성 과 전 망	2009	2014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관)	243	260('13)
테마별 과학관 확충(개)	13	34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확충(개소)	28	75
농어촌 작은 도서관 조성(개소)	93	153('13)
지방문화원 실버문화 프로그램 수(개)	137	170
문화 예술 및 체육행사 관람율(읍·면)(%)	38.4	60

가. 현황과 문제점

□ 여가시간을 활용할 문화 인프라가 취약하고 접근성도 불리

- 공연·전시장, 영화관, 도서관 등 문화·여가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원격지 마을의 경우 교통 불편 등으로 접근성이 제약

* 평균 시설 수('05) : (공연장) 군 0.7개소, 대도시 40.86개소, (전시장) 0.7/27.4, (영화관) 0.3/41.6, (도서관) 1.6/20.7, (문화복지시설) 5.8/59

□ 찾아가는 문화·예술 서비스 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나, 농어촌 주민의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양적·질적으로 부족

- 농어촌 주민의 문화향수 비율이 저하되고 있으며, 문화예술 행사의 품질에 대한 만족도가 높지 않음

* 문화향수비율('06~'08) : 도시지역은 1~4.4% 증가, 농어촌은 8.1% 감소

* 농어촌 주민의 문화예술행사 불만족 이유 : '내용이 다양하지 못해서'와 '수준이 낮아서'가 주된 요인으로 조사('08 문화향수실태조사)

□ 농어촌의 특성을 반영한 문화지원 프로그램이 부족하고, 부처간 관련사업의 연계 강화 필요

* 예) 학교도서관 장서확충사업(교과부)과 문학나눔(문화부), 방과후 학교지원(교과부)과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문화부) 등

□ 산업화·도시화로 농어촌에 고유한 전통문화가 사라져 가고, 청장년층의 유출로 이를 계승할 인력부족 및 지원체계 미흡

나. 주요 추진과제

5-1. 생활친화형 문화·여가 인프라 구축

◇ 주민의 수요,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농어촌에 부족한 문화, 학습, 체육관련 시설 확충 및 프로그램 연계 운영

(1) 농어촌 공공도서관, 테마과학관 등 정보인프라 구축

□ 읍·면단위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 농어촌지역 공공도서관을 '13년까지 총 260관으로 확대(현재 243관)하여 도·농간 정보인프라 격차 완화

* '13년까지 전국에 OECD 국가 평균 도서관 인프라(인구 5만명 당 1관) 수준인 900개 공공도서관 건립

□ 과학·생태·역사 등 테마별 과학관 건립 지원

- 우주·천문, 조류·곤충·공룡·갯벌, 역사 인물 등의 테마를 선정하여 과학·문화 정보접근 및 생태체험기회 확대
- 지자체 수요 및 준비상황 등을 고려, 현행 13개인 과학관을 '14년 34개 이상으로 확충

(2) 농어촌 생활체육 인프라 구축

□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조성 지원

- 학교, 등산로, 약수터, 마을 공터 등에 주민이 선호하는 시설 위주 설치

* 학교 내 야간체육시설, 농구장·게이트볼장 등 간이운동시설, 휴게시설, 어린이 놀이터, 산책로 및 조깅로 등

□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조성 지원

- 유사시설이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다목적 체육·문화시설 설치
 - 레크레이션 센터, 다목적 구장 등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모델로 지원
- * '10년 7개소('06~'10년 간 총 35개소) 설치 후 사업규모 확대 검토

(3) 생활친화적 문화공간 조성 지원

□ 정미소, 폐교 등 활용도가 낮은 시설을 개보수하여 새로운 문화교류 공간으로 조성

- 문화교류 프로그램의 장, 주민의 문화체험·창작공간으로 활용
- 시범사업('09~'11)결과를 토대로 지역별로 확대 추진

□ 농어촌 작은 도서관 조성

- 공공도서관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유휴 공공시설 등을 활용하여 작은 도서관 조성('13년까지 153개소 조성)

(4) 지역문화 컨설팅 기반 구축

□ 권역별 지역문화서비스센터*를 활용하여 농어촌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 선정 및 컨설팅 제공

- 시설, 인력, 프로그램을 연계, 문화컨텐츠 및 여가활용 정보를 집적하여 주민에게 효과적으로 전달

* 전주권 문화정보114, 원주·횡성 문화정보센터, 경북북부권문화정보센터 운영 중

□ 지방대 활용 지역문화 컨설팅 제도 활성화

- 지역문화정책, 지역문화시설의 운영개선, 문화·관광프로그램 개발 및 컨설팅 지원 ('09년 17개 시군 컨설팅 지원)

* 예) 보성군-한영대 : 보성분청찻사발의 확산 및 보성녹차와 연계한 문화상품 개발

5-2. 농어촌 주민 문화향유 지원

◇ 주민 참여를 바탕으로 생활 속 문화향유 기회 확대

(1)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문화서비스 확대

□ '방방곡곡 문화공감' 지원

- 농어촌 지역 문예회관을 거점으로 국립극단 등 국립예술단체('09년, 11개 단체 참여)의 우수프로그램 순회 활동 강화
- 우수 민간예술단체를 선정, 농어촌에 파견 또는 순회공연 등을 통해 우수 공연·전시프로그램 관람기회 제공

□ 찾아가는 도서관·박물관·미술관 운영 확대

* ('09) 도서관(40개관, 24회), 박물관(77회), 미술관(10회)

□ 문화소외계층의 문화향유기회 확대를 위한 '문화나눔' 사업을 농어촌 특성에 맞게 집중 추진

- 문화바우처(전시·공연), 스포츠바우처(체육센터 이용), 복지관광, 사랑티켓(전시·공연) 사업 등

□ 지방문화원을 지역별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문화활동의 거점 기관으로 활성화

- 은퇴 및 귀향전문인의 역량과 전문성을 향토문화 발전과 청소년 창의성 계발에 기여토록 운영
 - 역사문화유적탐방, 문화·예술 체험프로그램, 향토문화 프로그램, 다문화가정 문화활동 등 지원 ('09년 150개원)

* 프로그램 수/예산 : ('09) 137개/19억원 → ('10) 150/23 → ('14)170/25

(2) 지역 문화활동 활성화 기반 구축

□ 농어촌지역 '생활문화 공동체 만들기' 추진

- 자생적 문화클럽을 조성하고 맞춤형 프로그램·강사 지원
 - 농어촌지역 등을 중심으로 '12년까지 80개소 조성
- 농요, 세시풍속 등 전통 생활문화·예술 발굴 및 창작 지원
 - 지역별 세시풍속 및 민속놀이 관련 자료 및 지도서 개발
 - 지역주민의 생활 속 문화예술 활동 지원 강화

□ 지역의 향토문화 관광축제 지원

- 전국의 주요 축제를 단계별(대표, 우수, 유망 등)로 구분, 차등지원
 - 다양한 문화콘텐츠 개발 지원 등을 통해 관광객 유치 확대

□ 농어촌 지역개발과 문화예술프로그램과의 연계 강화

- 문화예술 프로그램 유치를 희망하는 마을에 현지시설을 활용한 문화예술 공연·전시 등 우선 추진
- 농촌지역개발 교육과정에 문화예술 강좌를 설치하고 문화예술관련 교육에 지역개발전문가, 마을리더, 담당공무원 등 참여 확대
- 농어촌개발정책과 문화예술 정책의 협력강화를 위해 농림수산 식품부-문화체육관광부간 MOU 체결 추진

5-3. 문화예술 전문인력 지원 및 교육 강화

◇ 문화예술 관련 전문인력 확충·파견 지원 및 농어촌학생의 문화예술교육 기회 확대

□ 마을문화시설 등에 문화예술 전문인력 파견

- 농어촌 작은 도서관이나 문화시설에 사서 또는 문화예술 전문인력을 파견(순회)하여 주민의 문화 및 여가활동 확산 지원

□ 농어촌 초·중·고교 문화예술교육 확대

- 청소년의 감수성 함양 및 창의력 개발을 위해 농어촌 지역 '문화예술교실' 운영 등 방과 후 문화예술교육 강화

- 방과 후 교육(교과부)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 도모

* 방과 후 문화예술교육 관련 사업의 연계협력을 위해 교육과학기술부-문화체육관광부 간 업무협약(MOU) 체결('08.10))

- 초·중·고교 예술 강사(연극, 무용 등) 지원 확대

* ('09) 전국적으로 4,700개교 150만명 학생 수혜

- 전교생에게 창의적 문화·예술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예술꽃씨앗학교'를 농어촌 지역에 확산

* ('09) 시범학교 10개소 중 농어촌학교 6개소 포함

□ 창의적인 지역문화 개발을 위한 인적역량 강화

- 지역문화 활동가를 대상으로 문화예술과 지역문화 콘텐츠가 결합된 지역 문화창조 교육기회 확대

- 다양한 분야의 지역문화예술 인력 간 교류를 통한 협력네트워크 형성 유도

6

농어촌 환경·경관 개선

목 표

흙·물·생명이 살아있는 아름다운 환경과 녹색성장기반 조성

주
요
과
제어메니티의
체계적 관리

- ▶ 경관개선활동 지원 확대
- ▶ 경관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확충

농어촌 환경오염방지

- ▶ 하수도 정비 및 폐기물 처리 지원
- ▶ 친환경농업 확산으로 농업오염 부하 저감

녹색성장기반 확충

- ▶ 바이오매스 이용시설 지원 확대
- ▶ 환경부하 저감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성
과
지
표

성 과 전 망	2009	2014
어메니티 자원도 구축 비율(%)	53	100('13)
하수도 보급률(%)	45.7('07)	71
화학비료 사용량(kg/ha)	292	200
친환경농업지구(개소)	992	1,152
소하천 정비 확대(%)	40	45
목재펠릿 공급확대 ○ 주거용/시설원에 유류사용량 절감율(%)	-	7/20
가축분뇨 자원화율(%)	85	90

가. 현황 및 문제점

- 농촌다운 자연환경과 전원경관 등 유·무형 자원(amenities)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으나, 체계적인 관리·활용 부족
 - 주민참여 속에 지역이 주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어메니티를 스스로 보전하려는 노력 촉진 필요
 - 경관보전직불제가 경관작물 중심으로 추진되어 마을경관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개선하는 데 한계
- 농업용 폐자재, 생활 쓰레기 및 오폐수 등 환경부하 증가에 비해 처리능력과 환경개선 활동은 미흡
 - 하천변, 항구 등에 폐비닐, 농약병, 폐어구 등 각종 쓰레기가 방치되어 경관훼손 및 환경오염 유발
 - '94년부터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도 하수처리율은 낮은 수준

* 하수도보급률('07년) : 농어촌 45.7%, 일반시 91.5
- 농어촌지역 소하천의 정비율이 낮아 홍수피해 빈발
 - 미정비된 소하천이 60%에 달하여 홍수 등 재해위험에 취약

* '08년까지 총연장 35,815km 중 14,342km 정비 완료
- 가축분뇨 등 농어촌 바이오매스의 자원화·에너지화 및 지열, 태양열, 풍력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원의 활용 미흡
 - 축산분뇨('08년, 약42백만톤)의 경우 대부분(84.3%) 퇴·액비로 영농자원화하고 있으나 일부는 정화(9.8%) 및 해양 투기(3.5%)로 처리

나. 주요 추진 과제

6-1. 농어촌 어메니티의 체계적 관리·활용

◇ 지역주민 주도로 어메니티 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확충

(1) 경관보전직불제, 조건불리직불제를 마을경관 개선활동 지원 프로그램으로 정착

□ 작물 보조금에 편중된 경관보전직불제를 마을을 포함한 생활·자연 경관, 역사·문화자원 보전활동에 대한 포괄적 지원으로 확대

○ 마을과 시·군간 협약기간을 연장하는 등 경관협약 내실화

□ 조건불리직불제는 대상지역 선정기준을 완화하고, 지원단가를 상향조정하여 경관유지 효과 제고

○ '10년 직불금 지급단가 인상(밭 40만원/ha → 50), '11년 오지면의 경지경사율 요건 완화(14%→7%) 등 추진

(2) 지역별 고유한 식물경관 및 생태숲 조성 지원

□ 자생식물원 조성을 확대하여 향토 자생식물의 체계적인 보전 및 식물교육 등 자연학습 기회 강화

○ '14년까지 10개소의 자생식물원 조성('08까지 4개소)

□ 산림생태계가 보전된 숲 조성 및 복원 추진

○ 지역, 기후, 생태천이 등을 종합 고려한 생태숲 조성을 확대하여 건강한 여가 생활·자연학습 공간 제공

- '14년까지 48개소의 생태숲 조성('08년까지 33개소)

(3) 농어촌 경관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 농어촌 지역개발사업 추진시 경관을 고려하도록 사업별 '경관 관리계획' 수립을 단계적으로 의무화
 - 지역개발 사업 주체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경관지표와 경관계획 수립 요령을 마련하여 보급
- 지자체 단위의 농어촌경관계획 수립을 적극 유도
 - 주민 참여형 농어촌경관계획 수립시, 인센티브 부여 추진

(4) 지역주민 주도의 마을·경관 가꾸기 활동 촉진

- 주민의 자발적인 경관보전 활동을 지원하는 교육·컨설팅 강화
 - 주민들이 경관 관리 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실용 프로그램(경관맵, 경관가이드라인 등) 개발·보급
 - 마을·경관 관리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전문가를 활용한 교육, 컨설팅 체계 구축
- 어메니티 자원도를 구축하여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
 - '13년까지 전국 모든 읍·면을 대상으로 어메니티 자원도를 작성, 시·군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 농어촌 경관 가꾸기 운동 확산
 - 「우수 경관 컨테스트」 등을 통해 농어촌 경관에 대한 국민적 관심 제고
 - 컨테스트에서 입선한 우수작품은 달력 제작, 포털사이트 콘텐츠 제공 등 파생상품으로 활용하여 홍보효과 제고
 - 경관가꾸기 활동을 물·흙·바다 살리기 국민운동으로 발전 유도

6-2. 농어촌 환경오염 방지

◇ 농어촌의 생활 및 농어업 생산 환경을 개선하고 농어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요인을 최소화

(1) 하수도 정비 및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확대

□ 마을별 소규모 하수도 확충·정비 추진

- '14년까지 농어촌 하수도 보급률을 71% 수준으로 제고
 - 소규모하수도(500톤 미만/일) 신설·개량 및 면단위마을하수도 정비를 위한 투자 확대('10~'14 기간 중 11,166억원 지원)
 - * 농어촌지역(면단위) 하수도보급률 : ('05)35.8% → ('10P)56.0 → ('14P)71
 - 소규모 마을은 자연 친화형 하수처리시설 설치지원 검토

□ 농어촌 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폐기물 매립, 재활용을 위한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 확대

- 군 단위 이하 지역 소규모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확대
 - '10년~'14년간 33개소에 총 535억 지원

(2)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최소화

□ 친환경농업 확산을 통해 농업으로 인한 환경부하 저감

- 화학비료·농약사용 감축을 통해 '흙살리기' 추진
 - 화학비료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맞춤형 비료 지원으로 전환하고 유기질비료 공급(250만톤/연) 및 녹비작물 재배를 확대
 - * 화학비료 사용량 절감 : ('09) 292kg/ha → ('14p) 200
 - * 녹비작물 재배면적 : ('09)135천ha → ('14p)250

- 미생물, 천적 등을 활용한 생물학적 병해충방제를 확산하여 농약 사용 절감 유도

* 생물학적 병해충 방제면적 : ('09) 4.5천ha → ('14p) 8.4천ha

- 친환경농업지구 및 광역단지를 친환경농업 확산의 거점으로 활용

- 친환경지구 조성 : ('09까지)992지구 → ('14p)1,152

□ 폐비닐·폐농약용기 등 영농 폐기물 수거·처리 지원

- 농어촌 폐비닐 수거비 및 소각, 재활용 등 처리 지원

- '11년까지 적체폐비닐 제로화를 위해 민간 기술공모 위탁처리 또는 재활용을 위한 민간매각 실시

- 폐비닐 수거를 위해 '10~'14년간 총 731억원 투자

* '07년 기준, 영농폐비닐 적체량은 198천톤 수준['06년 적체량 276천톤 + '07년 발생량(추정) 340천톤 - 처리량 254천톤('07년 수거량 175천톤 포함)]

- 환경오염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폐 농약용기 수거 처리 지원

* 폐 농약용기 발생량은 감소 추세('01년 84백만개 → '06년 38백만개)

* '09년 한국환경자원공사-지자체-작물협회 출연금을 활용, 29억원 지원

(3) 하천 및 해양 환경 개선 지원

□ 농어촌지역 쓰레기 수거처리

- 하천·하구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묵은 쓰레기 수거

- 「하구·하천쓰레기 수거처리기본계획(환경부)」에 따라 관련부처·지자체와 협력하여 추진

- 농어민과 저소득층 등 공공근로인력(희망근로프로젝트) 활용연계 방안 강구

□ 해양폐기물 수거·처리 지원

- 국가어항·무역항 및 주요 연근해역의 부유·침적된 해양쓰레기 분포 및 실태조사와 수거·처리
 - 해양폐기물 수거를 위해 '10~'14년간 730억 지원
- 조업 중 인양된 해양쓰레기 수매 및 해안가 쓰레기 수거처리
 - 항포구에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로 수거처리 효율성 증대
 - '10~'14년간 443억(국비 295, 지방비 148) 지원
- '12년까지 해양배출 가축분뇨를 전량 육상처리 추진
 - 가축분뇨 해양배출량 : ('06)261만톤 → ('08)170 → ('12)0

□ 소하천 정비 등을 통한 수해 방지 및 생태계 보전

- 소하천 정비율을 '09년 40%에서 '14년까지 45% 수준으로 제고
- 생태수로 및 친수공간 조성을 위한 친환경 수로 정비
 - 생태환경 보전과 영농급수·유지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로여건에 따라 다양한 친환경 수로정비 공법 활용
 - * 수로비탈면 보강, 생태수로, biotope(생물서식공간) 확대 등
- '12년까지 96개의 농업용 저수지 뚝 높임을 통해 농업용수 및 환경용수 공급 여력을 확대하고 수질 개선을 도모

6-3.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 확충

◇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하여 쾌적한 농어촌을 만들고, 에너지 자립도 제고 및 난방비 부담 완화

(1) 바이오매스 이용 확대로 CO₂ 배출 저감 및 유류비 부담 완화

□ '13년까지 농산어촌 주거용 유류 사용량의 7%(37만톤), 시설 원예 난방기 유류 사용량의 20%(50만톤)를 목재펠릿으로 공급

○ 시설원예난방기 설치·교체시 펠릿보일러로 대체, 단계적으로 제조시설 확충 및 보일러 보급 확대

- 펠릿 제조시설 설치 : ('09까지) 5개 → ('13p) 41

- 펠릿 보일러 보급 : ('09까지) 3천대 → ('13p) 39

* 목재 펠릿 이용시 경유에 비해 비용은 1/3,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12 수준

○ 목재 펠릿의 품질향상 및 소비자 신뢰확보를 위해 펠릿 품질 인증 시스템 구축

□ 유리온실 등에 대한 지열난방 시스템 도입으로 비용절감 및 품질 향상 도모

○ '10년 시범사업 추진후 확대(1,200억원, 250ha)

* 난방열량 단가(원/천kcal) : 지열 39.6(전기누진요금제 제외), 경유 191.7, LPG 229.3, 심야전력 72.5

* 지열난방 : 계절에 따라 온도가 변하는 지상과 온도가 일정한 지하의 온도차를 이용한 에너지 활용시스템

□ 가축분뇨 자원화 및 에너지화 시설 확충

○ '13년까지 자원화 시설 76개소('09, 40개) 설치 및 에너지화 시설 확대로 현재 85%인 자원화율을 90%로 제고

- 가축분뇨 액비 활성화를 위해 비료공정규격을 현실에 맞게 조정

* 에너지화 시설 1개소 당 8만Kwh 생산(6백여 농가에서 한 달 동안 사용 가능)

○ '13년까지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시설 17개소 확충 추진

- 가축분뇨, 음식쓰레기, 음폐수, 하수슬러지 등 유기성 폐자원으로 바이오가스를 생산

□ 농작물 및 해조류를 이용한 바이오에너지 기술 개발

○ 바이오에너지 추출에 적합한 갈대·억새 등 비식용 농작물의 품종 개발 및 유희지를 활용한 시험재배로 상용화 토대 마련

* ('13년) 기초기술 개발 → ('16년) 응용기술 개발 → ('18년) 상용화

○ 우뚝가사리 등 해조류 대량 양식장 조성('20년까지 50만ha) 등을 통한 에너지화 기반 구축

(2) 환경친화적 에너지를 활용한 새로운 녹색공간 창출

□ 신재생에너지 시설이 집적된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

○ 소규모 마을(40~50호)을 대상으로 바이오매스·풍력·태양력 등을 이용한 에너지 자립형 녹색마을로 리모델링

- '12년까지 시범사업 실시, '20년까지 전국적으로 600여개 조성

○ 친환경·저에너지형 농어촌 주택 표준설계도 개발·보급

□ 농업용 저수지를 활용한 소수력 발전

○ 전국 농업용 저수지의 관개용수 및 하천유지수 등을 활용한 전기에너지 생산·공급으로 화석연료 사용 절감

- '16년까지 발전소 57개소(연간 8만Mwh 전기 생산)건립 지원

* '09년까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8개소(2개소 건설중)를 건립하여 운영 중

7 지역발전 역량 강화

목 표

농어촌을 이끌어갈 인재 육성과 협력적 개발



주요 과제

인적자원 육성

- ▶ 교육훈련강화
- ▶ 교육프로그램 품질 제고

지역발전 컨설팅 강화

- ▶ 컨설팅 기관 인증제 도입
- ▶ 총괄계획가 제도 운용

지역개발 네트워크 구축

- ▶ 지역발전협의회 구성 운영 유도
- ▶ 농어촌개발 포털 사이트 확충

도시민 참여

- ▶ 도시민 유치 활동지원 확대
- ▶ 도시 인재 농어촌 연결 시스템 구축

성과 지표

성 과 전 망	2009	2014
주민역량강화 교육 인원(천명)	26	60
핵심리더 양성(명)	-	10,000
체험마을 사무장 확대(명)	465	1,000
지역개발 우수컨설팅 기관 인증제 도입	-	도입('11)
도시민 농어촌 유치(명)	2,664	10,000

가. 현황과 문제점

□ 농어촌 지역개발 사업기획·추진에 있어 마을리더·주민, 지자체 등 지역 주체의 주도적 역할이 중대

- 마을 사무장 등 지역개발 인력이 상당수준 육성되었으나 양적·질적 저변이 아직 미약

* 사무장 인력현황(명) : ('04) 0 → ('09) 465

□ 컨설팅업체 등 외부전문가 활용이 늘고 있으나, 지역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접근보다 유사한 모델을 양산한다는 비판

* 농어촌지역개발 민간 컨설팅업체(농식품부 D/B) : ('04)15 → ('08)63

□ 역량강화 교육이 현장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교육 이수 후 지역에서의 활동과 연계 미흡

- 마을리더 위주의 정부 정책방향이나 이론 교육에 치중, 주민·지자체 공무원·사회단체 등에 대한 특성화된 교육프로그램은 미흡
- 지역개발 전문가를 수요가 있는 지역에 체계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시스템 미흡

□ 주민, 전문가, 유관기관, 지자체 등 참여 주체간 거버넌스 형성 부족

- 지역개발 주체 간 자발적 협력으로 지역 내 역량을 향상시키면서 지역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추진체계 미흡

* EU의 경우, 이해관계인·전문가를 조직화하여 역량향상, 정책건의, 사업시행 등 역할을 수행하게 하는 주민 참여형 농촌개발프로그램(LEADER) 운영

- 지역개발사업 관련 이해당사자간 의견 수렴이 부족하여 사업 추진 시 갈등 요인으로 작용

- 출향인사, 1사1촌 자매결연기업 등 지역발전을 후원할 수 있는 외부지원그룹의 체계적 활용 미흡

나. 주요 추진과제

7-1. 지역발전 인적자원 확충

◇ 농어촌 주민과 마을리더 등에 대한 수요자 중심의 교육 강화

(1) 단계별·맞춤형 교육훈련 강화

□ 주민에 대한 현장 방문교육 강화

- 사업 준비단계부터 우수사례 견학 등을 통해 지역개발에 대한 이해 및 참여의식 제고

* 주민역량강화 교육 계획(누계) : ('05~09) 26천명→ ('14까지) 60

□ 전문교육을 강화하여 '14년까지 지역개발 핵심리더 1만명 육성

- 마을사무장, 대표 등에게 기존의 역량강화 교육후 경영, 회계관리 등 전문교육 기회를 추가로 제공하여 현장 적용능력 향상
 - 우수 리더에 대해서는 마을 CEO 인증 등을 통해 사기 양양
- 지자체 및 지역개발 관련 기관 담당자에 대한 전문교육과정 신설

□ 교육 이수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체계 구축

- 교육이수자 풀(Pool)을 구축 하여 지자체·마을 등이 마을사무장 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 체험마을 사무장 등 운영 확대: ('09) 465명→ ('10) 605→ ('14) 1,000

(2) 역량강화교육 품질 제고

□ 도농교류·지역개발 전문인력 '양성프로그램', '교육과정' 인증 활성화

- 프로그램 인증을 통해 우수 교육소프트웨어 개발을 유도하고 교육과정 인증을 통해 마을해설사, 체험지도사를 양성하는 우수 민간교육기관 육성

□ 교육쿠폰제 도입 등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과정 운영

- 대학과 지자체 교육원 등 교육기관 및 프로그램을 다양화

7-2. 지역발전 컨설팅 강화

◇ 지역주도의 지역개발체계 정착을 위해 컨설팅 지원 내실화

(1) 지역개발 우수 컨설팅 기관 인증제 도입 추진

- 컨설팅 품질제고 및 수요자 정보제공 강화를 위해 컨설팅업체의 역량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우수기관으로 인증
 - 사업 실적, 전문가 확보수준, 주민 만족도, 보유자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는 시스템 개발
 - 농어촌공사 또는 컨설팅 관련기관협회가 인증토록 하는 방안 검토
 - '10년 중 평가시스템을 개발, '11년부터 적용 추진

(2) 농어촌지역개발 총괄계획가 제도 활용

-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개발계획 수립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총괄계획가 제도 도입('09.6월 관련법 개정 및 12월 시행)
 - 지역개발 관련 교수·전문가 중에서 시장·군수가 위촉, 중장기 지역개발 방향 수립 및 마을정비계획 등 총괄·조정 역할 수행
 - 지자체가 제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마련('10)

(3) 지역(마을)별 전담 컨설팅제 정착 유도

- 현행 농촌마을종합개발 등에서 활용하고 있는 전담컨설팅제도를 농어촌 지역개발 관련 포괄보조사업 전체로 확대
 - 지역개발 전문가, 총괄계획가, 컨설팅 기관 등에 대한 DB를 구축하고 지자체와 연계하는 시스템 마련

7-3. 지역개발 네트워크 강화

◇ 마을리더, 전문가, 컨설팅업체 등 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유도하여
정보교환 및 지역 간 연계사업 활성화

(1) 지역별·분야별 네트워크 구축 지원

□ 시·군별로 마을대표,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지역발전협의회 구성

- 마을리더 모임 등 지역의 자율적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하여 지역별 발전방향에 대한 합의형성 유도
- 지역 특성과 여건에 맞는 사업 발굴·계획수립, 모니터링, 주민 역량강화교육 지원 등을 통해 상향식 지역개발의 기초 조직화

(2) 전국단위 지역개발 네트워크 구축 유도

□ 지역별·분야별 네트워크가 전국단위 협의체로 발전하도록
'(가칭) 농어촌 지역개발 네트워크' 설립 지원

- 전국단위의 포럼·워크숍 개최 등을 통해 우수사례·정보교환, 지역간 연계사업 모색기회 제공
- 네트워크조직 역량 축적 후 교육과정 인증 권한 부여방안 검토
- * 예)전문인력양성 교육과정(도농교류 등) 및 교육기관(체험지도사 등) 인증 등

(3) 농어촌 개발 포털사이트 확충

□ 농촌마을 정보제공, 도농교류 지원을 위한 포털사이트(www.welchon.com)를
농어촌 지역개발 관련 종합 포털사이트로 운영

- 지역개발 관련 기관·단체, 전문가 교육과정, 마을정보 등을 종합 제공

7-4. 도시민 및 귀농인력 등 활용 강화

◇ 도시 우수 인력을 농어촌 지역개발에 적극 활용하도록 지원

(1) 시·군의 도시민 유치활동 지원

□ 농어촌 이주 의향 형성, 이주 준비와 실행, 정착 등 단계별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귀농·귀촌 유도

○ 시·군에 도시민 유치를 위한 전담창구를 마련하고, 「귀농·귀촌 종합센터(농협)」와 연계·협력

* 도시민 유치지원('07.1~'09.7) 후 귀농 719가구(1,748명), 귀촌 343가구(916명)

* 시·군 전담기구 설치·운영 : ('09) 10개 시·군 → ('10~'12) 22 → ('13이후) 30

□ 귀농·귀촌 도시민이 전문지식을 활용,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

(2) 도농간 취업 및 인력교류 추진('11~'14)

□ 도시·농어촌을 연결하는 인재 매칭시스템 구축('10)

○ 농어촌 지역에 관심 있는 은퇴교사, 예술가, 기술자 등 도시민·단체를 농어촌 마을·단체와 연결·중개

□ 중개전담기관을 지정하여 희망도시민에 대하여 일정기간 연수후 체험·교류를 추진토록 유도

○ 취업·봉사분야 등 다양한 교류프로그램, 활용모델 발굴·보급

* 지자체 농업엑스포 등 행사지원, 체험지도, 환경·경관·문화보전활동 등

□ 1사1촌 운동과 더불어 출향인사를 중심으로 '내고향돕기' 운동 전개

V. 계획의 실행 및 관리

1 계획 수립 및 평가 체계

- ◇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각 부처) 및 지자체 5개년계획(시·도) 수립·추진(시·군은 시도계획에 따라 계획 수립)
- ◇ 시행계획 추진실적의 현장평가 및 평가결과의 예산 연계 강화
 - 농어촌서비스 기준 운용평가와 연계, 정책 성과관리 강화

□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각 부처)

- 각 부처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당해년도 1월까지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사무국(농식품부)으로 제출
 - * 사무국에서는 매년말 다음 년도 시행계획 수립 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
- 사무국에서는 각 부처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위원회에 보고하고 국회에 제출

□ 시·도 및 시·군 계획의 수립

- 시·도는 기본계획에 따라 각 시·도 농어촌의 특성을 반영한 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시·군에 시달하고, 농식품부로 제출
- 시·군은 시·도 계획에 의거 5개년계획을 수립하고 시·도로 제출, 시·도는 시·군 계획을 종합하여 농식품부로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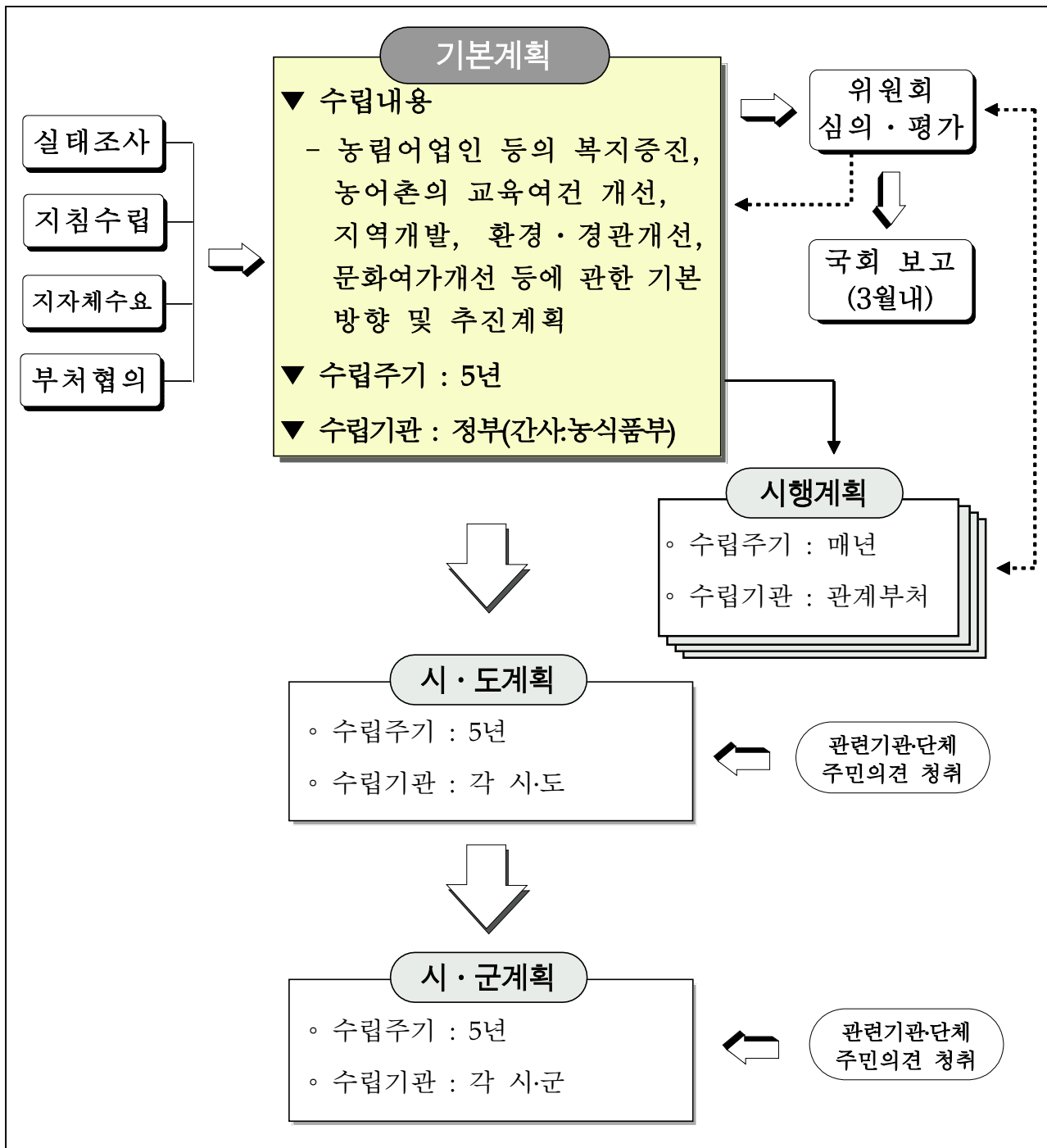
□ 매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점검 평가 시 현장평가 강화

- 분야별 전문가, 농업인단체 등으로 외부 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 매년 투자계획의 집행실적 및 사업추진 성과 등을 점검
 - 주요 사업에 대하여는 서면평가 이외에 현장 평가 강화
- 평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차차년도 예산에 반영

□ 시·도 및 시·군에서는 자체점검 평가 실시단을 구성하여 점검

< 기본계획의 추진체계 및 역할 >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2

삶의 질 향상 정책 추진체계 강화 방안

- (배경) 제2차 삶의 질 향상 계획에서 새로이 도입되는 제도의 정착 및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추진체계 강화 필요
 - 농어촌서비스기준 및 농어촌영향관리 가이드라인 등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업무량 급증
 - 1차 계획 추진 과정에서 위원회의 기획·조정 기능 발휘에 한계
 - 농어촌 삶의 질 실태에 관한 지표개발, 정책 추진상황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분석 등을 강화할 필요
 - 현행 사무국(농식품부) 인력(2인)으로는 위원회 업무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에 한계
- (추진체계 강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추진체계 강화 방안 마련
 - 농어촌서비스기준, 농어촌영향관리 가이드라인 업무 총괄과 정책 기획·조정기능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사무국 확대 개편 검토
 - 사무국 업무에 대한 지원 및 지자체 삶의 질 향상 정책 자문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관련 전문 기관 등에 (가칭)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지원센터」 설치·운영 검토

VI. 투융자 계획

□ 계획기간 중 총 투융자규모는 34조 5천억원 수준으로 1차 계획기간 실적(22조 3천억원) 대비 55% 증가

○ 국비 22조 7천억원(총 투융자규모의 65.8%), 지방비 11조 1천억원(32.2%), 기타 7천억원(2.0%)으로 구성

○ 연평균 투자규모는 6조 9천억원으로 '09년 대비 약 1.3배

* 제1차 계획기간 대비 투융자계획이 증가한 사유는 환경부문이 삶의 질 계획에 새롭게 포함되었고, 부문별로 일부 사업들이 증액 또는 추가되었기 때문임.

□ 국비 22조 7천억원의 연평균 투자규모는 4조 5천억원 수준으로 '09년(3조 6천억원) 대비 약 1.3배

구 분		2009	제2차 삶의 질 향상 5개년 투융자					
			2010	2011	2012	2013	2014	합계
합 계		54,270	65,336	65,557	69,321	71,739	73,448	345,401
재 원 별	국 비	35,937	40,371	43,141	45,836	48,155	49,332	226,835
	지방비	18,112	24,324	20,935	21,994	22,051	22,519	111,823
	기 타	221	641	1,481	1,491	1,533	1,597	6,743
분 야 별	복지	7,943	8,648	9,091	10,131	11,128	11,148	50,146
	교육	6,530	5,795	2,641	2,374	2,443	2,450	15,703
	기초생활 기반확충	20,137	26,596	23,453	24,438	25,769	27,047	127,303
	경제활동 다각화	6,749	7,374	7,012	7,269	7,342	7,461	36,458
	문화·여가	1,145	1,152	1,587	1,693	1,523	1,528	7,483
	환경·경관	11,766	15,770	21,773	23,416	23,534	23,819	108,312

- 1) 연도별 투자규모는 각 부처 국가재정운용계획(안) 등을 반영한 것으로 해당연도 예산 편성 시 조정될 수 있음
- 2) 지역발전 역량강화 분야는 경제활동 다각화 및 기초생활기반 확충 분야에 포함
- 3) 지방비는 국비 매칭자금 및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만 포함
- 4) '09년 투융자규모는 제2차 기본계획 분야에 맞추어 재구성한 것으로 제1차 기본계획 상의 '09년 투융자 규모와 다름

< 2014년 농어촌 미래상 >

- ◆ 자연경관이 잘 보전되고 주택, 교통, 의료, 복지 등 기초생활 여건이 갖추어진 쾌적한 전원생활 공간으로 발전
 - 제2의 인생을 전원에서 보내려는 도시 은퇴자 등의 귀농·귀촌으로 농촌인구 감소세가 완화 또는 증가세로 반전
(농어촌 인구비중 : 17~18%)
- ◆ 농어업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탈피하여 지역 부존자원을 활용한 제조·가공산업, 관광·휴양산업이 연계된 복합산업 공간으로 변모
 - 농어업은 1차 산업에서 생산-가공-유통 서비스업이 결합된 고부가가치의 6차 산업으로 탈바꿈
- ◆ 농어업·농어촌의 다원적 가치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높아지고, 도농교류가 다양화·내실화 되어 도농상생의 분위기 정착
 - 농어촌마을과 기업·학교·도시아파트 자매결연 등 형태가 다양해지고 교환방문, 체험영농, 친환경 농산물 직거래, 문화교류 등 내실화
- ◆ 지역개발에 있어서 지역의 특수성이 강조되고,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상향식 개발방식 정착
 - 지역별 전통음식, 전통문화 등을 계승발전시켜 세계적인 상품화하고 국제적인 교류도 확대
 - 지자체와 민간단체(NGO), 지역주민이 지역의 발전방향을 협의하는 새로운 형태의 거버넌스 확산

참고 1

농어촌 서비스 기준

부문 (개수)	관련 항목	서비스 기준	관련 기관
주거 (5)	거주가능 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저주거기준 이상 주택(거주가구) 비율을 90% 이상으로 제고한다¹⁾. * 최저주거기준 이상 가구 '08년 : 77.9% → '14년 : 90.0% 	농식품부 국토부 지자체
	난 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읍지역 도시가스 보급률을 50% 수준으로 높이고, 도시가스 보급이 어려운 지역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난방비 저감정책을 우선 추진한다. * 읍지역 도시가스 보급률 '09년 : 32.9% → '14년 : 50% 	지경부 산림청
	공동시설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로당, 마을회관 등 마을공동시설의 유지관리 및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지자체 농진청
	안전한 마실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지역 상수도 보급률을 75% 이상으로 높인다. 지자체는 원수 수질검사와 먹는물 수질기준에 따른 수질관리를 해야 한다. * 면지역 상수도 보급률 '07년 : 45.2% → '14년 : 75.0% 	환경부 지자체 농식품부
	오폐수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수도 보급률을 71% 이상으로 높인다. * 농어촌 하수도 보급률 '07년 : 45.7% → '14년 : 71.0% 	환경부
교통 (3)	대 중 교 통 운 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보 15분 거리 내 버스 정류장에서 노선버스, 순환버스 등 대중교통을 하루 3회이상 이용할 수 있다. 수요 부족으로 대중교통 운행이 어려운 지역은 수요 대응형 준공공교통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 3회이상 대중교통 운행('05년) : 89% 	지자체 (국토부)
	여객선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지역의 경우 모든 본도에 1일 왕복 1회 이상의 여객선이 운행된다. 도서의 주민은 여객선 운임의 일부를 지원받는다. 	국토부 지자체
	인도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읍·면 소재지에 접근하는 주요 농어촌 생활도로 정비시 차도와 구분된 인도를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지자체 (행안부 국토부)

부 문 (개수)	관 련 항 목	서 비 스 기 준	관 련 기 관
교육 (6)	유치원/ 초·중학교	• 지역여건에 맞는 적정규모학교를 육성하고 적절한 통학수단을 제공한다.	교과부
	고등학교	• 시군에 1개교 이상 우수 고등학교를 육성한다.	교과부
	폐교요건	• 폐교시 학생들의 통학 및 폐교시설의 재활용 대안에 대해 공청회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다. * 폐교 요건 '09년 : 학부형 동의 → '14년 : 지역주민의 의견 반영	교과부 지자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 교과 과목, 특기 적성 등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참여 비율을 70%이상으로 제고한다. * 방과 후 학교 참여율 '08.10월 : 52.8(전국) → '14년 : 70%	교과부
	교육발전위 원회	• 시·군에 지자체와 교육청, 주민 등으로 구성된 교육발전위원회를 설치한다.	교과부
	평생교육	• 읍·면별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비스 거점시설이 1개 이상 운영된다.	교과부 문화부 지자체
보건 의료 (3)	1차진료 서비스	• 시·군내에서 내과, 한방과, 물리치료실 등 중요과목 의사 진료가 가능하다.	복지부
	순회방문	• 마을별로 월 1회 이상 보건소 등의 전문인력의 순회 방문을 받는다.	복지부
	의약품구입	• 자동차로 20분내에 일반의약품 구입이 가능하다.	복지부 지자체
사회 복지 (5)	노 인	• 도움이 필요한 노인은 주 1회 이상 재가노인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지자체 (복지부)
	청소년	• 자동차로 30분내에 청소년센터에 도달할 수 있다.	복지부
	아 동	• 자동차로 20분내에 초등학생들을 위한 아동센터 등 방과후 돌봄시설에 도달할 수 있다	복지부 교과부 지자체 농식품부

1) 거주가능주택 항목은 국토부 '최저주거기준 개선방안('11년)' 연구결과에 따라 목표 조정 검토

	영유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정한 수요가 있는 지역에서는 자동차로 20분내에 소규모 영유아 보육시설에 도달할 수 있다. <p>* 보육시설: ('07년) 964개 읍면 → ('14년) 최소수요 존재시 모든 읍면</p>	복지부 지자체
	다문화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로 30분 내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시설에 접근할 수 있다. 교통불편으로 센터이용이 어려운 경우 방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p>* 다문화가족 지원 시설 '09년 : 36개소 → '14년: 전체 군지역</p>	복지부 농식품부
응급 (5)	응급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급환자 발생시 기본적인 응급 장비가 마련된 구급차가 30분 이내에 도착하여 응급처치를 한다. 	복지부 소방청
	도서·벽지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낙도·벽지에 헬기·선박을 이용한 환자 이송체계를 구축한다. 	소방청 해경청
	소방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재 발생 신고 접수 후 5분내에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하는 비율을 55% 이상으로 높인다. 	소방청
	도난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난방지 등을 위한 방범용 CCTV가 주요 간선도로 길목에 설치되어 있다. 	지자체 (경찰청)
	경찰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2 신고시 90% 이상 5분내에 현장에 도착한다 2) 	경찰청
문화 여가 (3)	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읍·면 내에서 도서 열람 및 대출이 가능하다. <p>* 읍면 작은 도서관 '09년 : 93개소 → '14년 : 1400개소</p>	문화부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로 30분 내에 문화예술회관 등 문화시설에 도달할 수 있고, 월 1회 이상 문화 프로그램과 분기별 1회 이상 전문 공연 프로그램을 관람할 수 있다. 	문화부 지자체
	찾아가는 문화공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과 지역 자체 문화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연 2회 이상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을 향유할 수 있다. <p>* 찾아가는 문화공연 '08년 : 연1회→ '14년 : 연2회</p>	문화부 지자체
정보 통신(1)	초고속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 어디에서나 초고속망 접속이 가능하고, 80% 이상에서 IPTV 시청이 가능하다. <p>* IPTV 시청 가능 '09년 : 26.1% → '14년 : 80%</p>	방통위

2) 경찰서비스항목은 '10년에 112 신고 평균 출동시간으로 기준 변경시 이에 따라 목표조정 추진

참고 2

광특회계 개편 및 포괄보조금 현황

1. '10년도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개편내용

□ 시·도 단위를 넘는 새로운 지역개발전략(기초생활권, 광역경제권, 초광역경제권) 추진을 위해 균특회계 개편('09.4.22)

○ (기존) 지역개발사업계정, 지역혁신사업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개정) 지역개발계정, 광역발전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 ① **지역개발계정** : 시·도 또는 시·군·구 지역개발사업으로 편성
 - 유사사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통합, 포괄보조금 지원
 → 세부사업은 지자체 선택 (210개 사업 → 24개 사업 내외)
- ② **광역발전계정** : 전략산업육성, 지역인재양성, 광역SOC 등
 - 부처에 편성 권한 부여

□ '포괄보조금사업'의 개념

○ 재원용도를 포괄적으로 지정하고 시도별로 부여된 한도 내에서 자체 실정에 맞는 사업을 자율적으로 기획·설계

⇒ 종전 지역계정의 200여개 세부사업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도 포괄보조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지자체 자율적으로 발굴·예산신청 가능

□ 사업군 및 소관부처

분 야	부 처	포괄보조 사업명	기준 보조율
기초생활권 종합개발 (시·군편성)	국토부	①⑥ 성장촉진지역 개발	100%
		①⑦ 도심재생지역 개발	50%
	행안부	①⑧ 특수상황지역 개발	70%
	농식품부	①⑨ 일반농산어촌기초생활권종합개발	70%
기타사업군 (시·도 편성)	농식품부	②⑩ 농어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	50%
		②⑪ 농어업기반 정비	80%
	농진청	①⑥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50%
	산림청	①⑥ 산림경영자원 육성	80%
		①⑥ 산림휴양·녹색공간조성	50%

2. 포괄보조금사업 지원대상

□ 19개 포괄보조사업은 시도자율편성*, 낙후지역 개발 등과 관련된 5개 사업은 시군구자율편성**으로 운영

* 시·도는 신청한도 내에서 19개 포괄보조사업 중 선택하여 자원배분

** 시군구는 신청한도 내에서 해당 지역별 기초생활권 개발사업 선택

구분	부처	포괄보조 사업명	사업재편 이전 세부사업
시도 자율 편성 사업	문화부	①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②관광자원 개발 ③체육진흥시설 지원 ④지역문화산업 육성지원	·박물관, 문예회관 등(15개) ·문화도시, 관광지 개발(11개) ·운동장, 수영장 등(11개) ·문화콘텐츠센터 등(8개)
	문화재청	⑤문화유산 관광자원화	·지역문화유산개발 등(5개)
	농식품부	⑥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⑦농어업기반정비	·도농교류활성화 등(13개) ·밭기반 정비 등(13개)
	농진청	⑧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농촌지도기반 조성 등(5개)
	산림청	⑨산림경영자원 육성 ⑩산림휴양·녹색공간조성	·임산물 수출촉진 등(3개) ·휴양림, 수목원 등(4개)
	지경부	⑪지역특성화산업 육성	·섬유판선산업 등(10개)
	중기청	⑫전통시장 및 중소유통물류 기반 지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등(2개)
	복지부	⑬청소년시설 확충	·공부방, 수련시설 등(2개)
	환경부	⑭상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 ⑮자연환경 보전 및 관리	·생활용수공급 등(4개) ·자연환경보전 등(2개)
	국토부	⑯해양 및 수자원 관리	·연안정비 등(3개)
		⑰대중교통 지원	·물류단지 지원 등(5개)
		⑱민자유치접속도로 지원	·가덕대교 건설 등(6개)
		⑲지역거점 조성지원	·국민임대산단 조성 등(2개)
시군구 자율 편성 사업	국토부	⑳성장촉진지역 개발	·개축지구 지원 등(3개)
	행안부	㉑특수상황지역 개발	·접경지역 지원 등(15개)
	국토부	㉒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	·주거환경 개선 등(16개)
	농식품부	㉓일반농산어촌 개발	·전원마을 조성 등(15개)
	환경부	㉔도서지역식수원 개발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1개)

3. 농식품부 소관 지역개발계정사업(포괄보조) 주요내용

□ 시·도 자율 편성사업

① 농어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 : 도농교류등 13개사업(중전기준)

- * 포함되는 기존 사업 : 1.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 2. 농어촌테마공원조성 3. 농공단지조성 4. 어촌어항관광개발 5. 복합낙시공원조성 6. 완전미브랜드파워현대화시설설치 7. 한우명품화 8. FTA대비 축산경쟁력제고 9. 전통발효식품전용공장건립 10. 향토산업육성사업 11. 특화품목육성사업 12. 김육상채묘 및 냉동망 보관 13. 고효율어류사료생산공장건립

② 농어업기반정비 : 받기반정비등 13개사업

- * 포함되는 기존 사업 : 1. 받기반정비 2. 대구획경지정리 3. 농업생산기반종합정비 4. 농업사관학교건립 5. 전북실용농업교육센터건립 6. 씨감자생산기반조성 7. 소형어선인양기설치 8. 지방어항 9. 복합다기능 부잔교시설 10. 양식어장관리 11. 인공어초 12. 수산종묘관리 13. 내수면어업생산시설

※ 시·도 자율편성사업은 총 19개 사업군으로 구성되며, 지자체는 예산한도 내에서 19개 사업군 중 자율적으로 사업을 선택, 예산신청 가능

□ 시·군·구 자율 편성사업

③ 일반농산어촌 개발 : 농어촌생활환경정비 등 16개사업(중전)

- * 포함되는 기존 사업 : 1. 소도읍육성 2. 전원마을조성 3. 농촌마을종합개발 4. 어촌종합개발 5. 산촌생태마을조성 6. 농촌생활환경정비 7.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 8.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9. 지표수보강개발 10. 소규모용수개발 11. 신활력지역지원 12. 주거환경개선 13. 개축지구 지원 14. 도서종합개발 15.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16. 살기좋은도시만들기

※ 시·군·구 자율편성사업은 기초생활시설확충과 관련된 5개 사업군으로 구성되며 4개 사업은 시·군·구를 4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1개 부처가 사업 주관, 1개 사업군(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은 환경부 소관

- * 일반농산어촌 지역(농식품부, 120개 시·군(제주 포함)), 도시활력증진 지역(국토부, 7개 특·광역시 및 28개 시), 성장촉진 지역(국토부, 추후 선정), 특수상황 지역(행안부, 접경지역 15개 시·군, 372개 도서)

4. 일반 농산어촌 지역(기초생활권 종합개발사업 관련)

- 시·군 중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른 도농복합형태의 시(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 포함) 및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 지역
- 인구 50만 이상 도농복합의 시(포항·창원·천안·용인) 제외
- 또한, 특수상황지역(접경·도서)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

구 분	120개 시·군
경 기	평택시, 남양주시, 양평군, 이천시, 안성시, 화성시, 광주시, 여주군, 가평군
강 원	원주시, 강릉시,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양양군
충 북	충주시, 제천시, 청원군,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충 남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당진군, 연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전 북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전 남	여주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경 북	경주시, 김천시, 안동시, 상주시, 구미시, 영주시, 영천시, 문경시, 경산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경 남	합천군, 마산시,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거제시, 양산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제 주	제주시, 서귀포시

* 기초생활권 : 지역주민의 기본적인 삶의질 향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의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권역(163시·군)

1. 영국 : Rural Proofing

□ 도입 배경

- 1990년대 중반, 광우병과 구제역으로 농촌지역에서의 이동 통제 및 산업 위축, 농촌의 급격한 소득 감소
- 농촌살리기를 위한 범정부차원의 농촌을 고려한 정책 도입
 - 농촌백서(Rural white paper)에서 ‘농촌을 생각하기(Thinking Rural)’란 주제를 강조, 제도 도입의 단초를 마련
 - 정부 정책이 농촌지역의 주민, 사업체, 경관 등에 끼치는 영향을 합당하게 고려한 적이 거의 없었고, 농촌의 특수한 여건을 고려해 정책을 조정할 적도 거의 없었음을 지적

□ Rural Proofing 시행 주체

- 농촌청(Countryside Agency)에서 시작('01~'03) '04년부터 내각 산하 농촌위원회(Committee on Rural Affairs)에서 시행

□ 제도 의의

- 정부 및 유관기관이 정책 개발·시행 시 인프라가 취약하고 생활 서비스 공급 창구와 시설이 부족한 농촌지역 주민이나 기업들의 문제를 포함하여 농촌에 미칠 영향을 생각해보는 절차로서 기능

□ 내용: 농촌주민, 농촌경관, 사업체 등과 관련된 사항 중심

- 농촌지역의 특별한 여건이나 요구(needs)로 인해 정책이 농촌지역에 차별적인 영향(impact)을 미칠 것인지 검토
- 차별적인 영향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 평가
- 농촌 환경에 맞도록 정책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 검토

□ 주요활동

- 정책 개발 입안자가 '농촌적 차원'을 고려하도록 돕는 체크리스트 개발 및 보급
- Rural Proofing 활동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 및 내각에 제출
- 체크리스트의 지속적 수정 보완 및 12개 중앙정부의 체크리스트 수용 유도
- 영국 내각사무처가 모든 중앙정부정책에 대해 실시하는 규제영향평가 체크리스트 안에 Rural Proofing 체크리스트 포함
- 농촌포럼(Rural Affairs Forum) 창립
- 광역 정부사무소마다 '농촌국' 설립
- 내각 산하 '농촌위원회(Committee on Rural Affairs)'에 환경식품농촌부 Rural Proofing 보고

2. 캐나다 : Rural Lens

□ 도입배경

- 자연자원상임위원회는 '90년대 말, 도·농간의 소득 및 삶의 질 격차가 커지고, 농촌주민의 도시 이주가 사회 문제화됨에 따라 'Think Rural' 보고서를 발간('97)하여 농촌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 제안
 - 농촌정책영향평가 모니터링을 위한 Rural Lens 시책 포함

□ 제도의 주요내용

- 연방 정부 정책입안자들이 새로운 정책이나 사업이 농촌과 농촌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
 - 평가항목과 절차 제시

□ 추진체계

- 주체 : 농림부 내 농촌사무국과 캐나다 농촌 파트너십(CRP)이 공동 추진
 - (농촌사무국) 각 부처와 기관의 Rural Lens 사용 권장, 농촌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이슈에 대한 연구 분석 등 추진
 - (농촌파트너십) 'Think Rural'의 제안으로 만들어진 기구로서, 32개 정부부처 및 특별기구, 지방의 Rural Team 대표자로 구성된 농촌 정책 협의 기구

참고 4

기본계획 세부추진과제_133개 과제

관리 번호	세부과제	담당부처	협조부처
1	보건·복지 증진(37)		
1-1	농어업인 생활안정 강화(10)		
1-1-1-1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가족부
1-1-2-1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가족부
1-1-3-1	농업인 재해공제 지원	농림수산식품부	
1-1-3-2	수산업 안전공제 지원	농림수산식품부	
1-1-3-3	어선원 및 어선보험 지원	농림수산식품부	
1-1-4-1	농업재해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농촌진흥청	
1-1-4-2	농작업재해 원인구명	농촌진흥청	
1-1-4-3	안전한 농촌사회 구현을 위한 중장기 발전전략 연구	농촌진흥청	
1-1-4-4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 및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	농촌진흥청	
1-1-5-1	농부증예방 지원방안 마련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1-2	농어촌 보건·의료기반 확충(9)		
1-2-1-1	농산어촌 응급의료기관 인프라 확충(응급의료센터 포함)	보건복지가족부	
1-2-1-2	농어촌 119 구급지원센터 확충	소방방재청	보건복지가족부
1-2-1-3	낙도·오지응급환자 이송체계구축	지자체	보건복지가족부
1-2-1-4	공공보건기관 기반 확충	보건복지가족부	
1-2-1-5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 육성	보건복지가족부	
1-2-1-6	농어촌 보건의료 인력의 확보	보건복지가족부	
1-2-2-1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강화	보건복지가족부	
1-2-2-2	취약계층 작업안전기술·체험 교육매체 개발	농촌진흥청	
1-2-2-3	농업인 건강·안정 정보화 지원	농촌진흥청	

관리 번호	세부과제	담당부처	협조부처
1-3	농어촌 취약계층 복지 지원(15)		
1-3-1-1	농어업인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보건복지가족부	
1-3-2-1	농지담보 노후 연금제도 지원	농림수산식품부	
1-3-2-2	영세·고령농어업인 주거복지 개선	농림수산식품부	
1-3-2-3	경영이양 직불제	농림수산식품부	
1-3-3-1	농산어촌 보육시설 확충	보건복지가족부	
1-3-3-2	만5세아 무상보육 지원	보건복지가족부	
1-3-3-3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농림수산식품부	
1-3-3-4	여성친화적 지역사회 조성	여성부	
1-3-3-5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	농촌진흥청	
1-3-3-6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노동부	
1-3-4-1	다문화 가정 농업 교육	농림수산식품부	
1-3-4-2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	보건복지가족부	
1-3-4-3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 언어발달 지원	보건복지가족부	
1-3-5-1	취약농가 인력지원	농림수산식품부	
1-3-5-2	농업인 복지시책 교육·홍보 강화	농림수산식품부	
1-4	농어촌의 능동적 복지기반 강화(3)		
1-4-1-1	농어촌공동체회사 육성	농림수산식품부	
1-4-2-1	농어촌지역 사회적기업 활성화방안 마련	노동부	
1-4-3-1	농산어촌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농림수산식품부	
2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20)		
2-1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학교 육성(8)		
2-1-1-1	농산어촌 전원학교 육성	교육과학기술부	
2-1-2-1	농산어촌 연중 돌봄학교 육성	교육과학기술부	
2-1-2-2	방과후 교육활동 활성화 지원	교육과학기술부	
2-1-3-1	기숙형고교 육성·지원	교육과학기술부	
2-1-4-1	적정규모 학교 육성 선도군 지원	교육과학기술부	
2-1-5-1	농어촌 평생교육기반 확충	지자체	교육과학기술부
2-1-5-2	한국농수산대학 개편·운영	농림수산식품부	
2-1-6-1	시군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지자체	교육과학기술부

관리 번호	세부과제	담당부처	협조부처
2-2	우수 공교육프로그램 확충 및 교원 확보(4)		
2-2-1-1	우수 영어공교육 프로그램 제공	교육과학기술부	
2-2-2-1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지원	교육과학기술부	
2-2-3-1	농어촌학교 우수교원 유치방안 마련	교육과학기술부	
2-2-4-1	사이버 가정학습 활성화	교육과학기술부	
2-3	교육비 부담 경감 및 균등 교육 기회 제공(8)		
2-3-1-1	농어업인 고교생 학자금 지원	지자체(농식품부)	
2-3-1-2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지원	농림수산식품부	
2-3-1-3	농어촌 대학생 장학금 지원	농림수산식품부	
2-3-2-1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지자체	교육과학기술부
2-3-2-2	자영농수산고교 급식비 지원	지자체	농림수산식품부
2-3-2-3	농어촌고교생 기숙사 이용료경감	교육과학기술부	
2-3-2-4	무료통학버스 지원 확대	지자체	교육과학기술부
2-3-3-1	지역균형 선발제 확대 유도	교육과학기술부	
3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17)		
3-1	지역주도의 개발체계 정착지원(2)		
3-1-1-1	일반농어촌개발(포괄보조) 관리	농림수산식품부	
3-1-2-1	지역개발사업의 민간참여 확대	농림수산식품부	
3-2	정주계층별 선도거점 개발(5)		
3-2-1-1	신규마을 조성 및 마을재개발	농림수산식품부	
3-2-2-1	소생활권 종합정비 등	농림수산식품부	
3-2-3-1	지역거점 기능 향상	농림수산식품부	
3-2-4-1	농산어촌형 뉴타운 조성	농림수산식품부	
3-2-4-2	금수강촌 만들기 사업	농림수산식품부	
3-3	농어촌 기초생활여건 개선(10)		
3-3-1-1	농어촌주거환경 개선	농식품부	
3-3-1-2	농어촌주택 스레이트 철거처리지원	환경부	
3-3-1-3	농어촌생활용수개발	환경부	
3-3-2-1	농어촌 도로정비	지자체	행정안전부
3-3-2-2	교통서비스강화	지자체	국토해양부
3-3-2-3	국고여객선건조	국토해양부	

관리 번호	세부과제	담당부처	협조부처
3-3-2-4	내항여객선운임보조	국토해양부	
3-3-3-1	정보화마을 조성	행정안전부	
3-3-3-2	농어업경영체 정보화 지원	농림수산식품부	
3-3-3-3	농어촌정보이용 활성화	농림수산식품부	
4	농어촌의 경제활동 다각화(16)		
4-1	농어촌산업 고도화(9)		
4-1-1-1	복합산업화지원(포괄보조) 관리 (농어촌산업 활성화 기반 강화)	농림수산식품부	
4-1-1-2	향토자원 발굴 및 D/B화	농촌진흥청	
4-1-1-3	향토음식 자원화 사업	농촌진흥청	
4-1-2-1	농어촌 생산품 수요확대 지원	농림수산식품부	
4-1-3-1	농어촌지역 창업, 기업성장 지원	농림수산식품부	
4-1-3-2	소규모농업인 창업 및 소득화 지원	농촌진흥청	
4-1-3-3	농어촌 관광상품 품질제고	농촌진흥청	
4-1-4-1	지역간 연계·협력 프로그램 지원	농림수산식품부	
4-1-4-2	광역클러스터 활성화	농림수산식품부	
4-2	체험, 휴양기반 구축 및 도농교류 활성화(7)		
4-2-1-1	농가-마을-거점별 특성화된 농어촌 체험·휴양기반 확충	농림수산식품부	
4-2-1-2	산림휴양공간 조성	산림청	
4-2-1-3	수목원 조성 및 산림박물관 건립	산림청	
4-2-2-1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	농림수산식품부	
4-2-3-1	슬로시티 녹색관광 자원화	문화체육관광부	
4-2-4-1	농촌체험활동 활성화 지원	농촌진흥청	
4-2-4-2	초·중·고등학교의 농어촌 체험·교류확대	농림수산식품부	교육과학기술부
5	문화·여가여건 개선(12)		
5-1	생활친화형 문화·여가 인프라 확충(5)		
5-1-1-1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5-1-1-2	지방테마과학관 건립 지원	교육과학기술부	

관리 번호	세부과제	담당부처	협조부처
5-1-2-1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조성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5-1-3-1	생활친화적 문화공간 조성	문화체육관광부	
5-1-4-1	지역문화 컨설팅 기반 구축	문화체육관광부	
5-2	농어촌 주민 문화향유 지원(6)		
5-2-1-1	방방곡곡 문화예술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5-2-1-2	찾아가는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운영	문화체육관광부	
5-2-1-3	지방문화원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운영	문화체육관광부	
5-2-2-1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문화체육관광부	
5-2-2-2	향토문화 관광축제 육성	문화체육관광부	
5-2-2-3	지역개발과 문화예술프로그램 연계	문화부/농식품부	
5-3	문화예술 전문인력 지원 및 교육강화(1)		
5-3-1-1	농산어촌 학교 문화예술교육 확대	문화체육관광부	
6	농어촌 환경·경관 개선(19)		
6-1	농어촌 어메니티의 체계적 관리·활용(5)		
6-1-1-1	경관보전직불제	농림수산식품부	
6-1-1-2	조건불리지역직불제	농림수산식품부	
6-1-2-1	자생식물원 및 생태숲 조성	산림청	
6-1-3-1	농어촌형 경관보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농림수산식품부	
6-1-4-1	농촌경관조성 관리기반 기출 구축	농촌진흥청	
6-2	농어촌 환경오염 방지(8)		
6-2-1-1	농어촌지역 하수도 설치	환경부	
6-2-1-2	농어촌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	환경부	
6-2-2-1	유기질비료(친환경비료) 공급	농림수산식품부	
6-2-2-2	생물학적 병해충 방제	농림수산식품부	
6-2-2-3	친환경농업기반(지구조성) 구축	농림수산식품부	
6-2-2-4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	환경부	
6-2-3-1	해양폐기물 정화	국토해양부	
6-2-3-2	소하천 정비	소방방재청	
6-3	저탄소 녹색성장기반 구축(6)		
6-3-1-1	목재펠릿 사용 확대	산림청	
6-3-1-2	유리온실 등에 지열난방 지원	농림수산식품부	

관리 번호	세부과제	담당부처	협조부처
6-3-1-3	축산분뇨 자원화·에너지화	환경부	
6-3-1-4	가축분뇨처리 지원	농림수산식품부	
6-3-1-5	농작물 및 해조류를 이용한 바이오에너지 기술개발	농림수산식품부	
6-3-2-1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	환경부, 산림청 농식품부, 행안부	
7	지역역량 강화(12)		
7-1	지역발전 인적자원 확충(5)		
7-1-1-1	주민역량교육 강화	농림수산식품부	
7-1-1-2	핵심리더 1만명 육성	농림수산식품부	
7-1-1-3	역량강화교육 이수자 풀(Pool)구축	농림수산식품부	
7-1-2-1	우수민간교육기관 육성	농림수산식품부	
7-1-2-2	교육쿠폰제 도입	농림수산식품부	
7-2	지역발전 컨설팅 강화(2)		
7-2-1-1	지역개발 컨설팅기관 인증제 도입	농림수산식품부	
7-2-2-1	지역개발 총괄계획가제도 도입	농림수산식품부	
7-3	지역발전 네트워크 강화(3)		
7-3-1-1	지역발전협의회 구성	지자체	농림수산식품부
7-3-2-1	전국단위 지역개발 네트워크 구축	농림수산식품부	
7-3-3-1	농어촌개발 포털사이트 확충	농림수산식품부	
7-4	도시민 및 귀농인력 활용 강화(2)		
7-4-1-1	시군의 도시민 유치활동 지원	농림수산식품부	
7-4-2-1	도농 인재 매칭시스템 구축	농림수산식품부	

※ 포괄보조사업은 세부과제로 분류하지 않음